

백양사 겨울(장성) 김정국(출처 2022 전남 디지털사진 공모전 수상작)



제 99호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소식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News



전라남도의회
<https://www.jnassembly.go.kr>

죽녹원 후원(담양) 김진관(2021 전라남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Contents

- 004 |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 005 |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운영 성과
- 006 | 주요 의안 처리현황
- 022 | 5분 자유발언
- 044 | 상임위원회 활동
- 064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080 | 의원 동정
- 094 | 법령 입법 동향
- 096 | 의원 기고
- 110 | 의회 안내

전라남도의회 소식 VOL 99

발행인 서동욱 의장 편집인 사무처장 최종선

발행처 전라남도의회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 (061)286-8471

팩스 (061)286-8448

도민 생활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가 전 국민의 열렬한 호응과 성원 속에서 장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성황리에 끝을 맺은 행사들은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고 도민에게는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노력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집행부 여러분들을 비롯한 200만 도민께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소 렘피스킨병이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와 도민들은 자식 같은 소를 살처분하는 상황에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 사육 농가가 1만 8000가구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인 우리 지역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백신접종과 철저한 방역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의 포문을 열 자치조직권 확대와 자치입법권 강화 등 일부 진일보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져 가는 지방의회역의 역할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어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추진하는 의료 혁신안이 단순히 기존 의대 정원 확대만 밝힌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전남은 지금 당장 입학정원 수요조사조차도 할 수 없는, 의대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대 설립에 대한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 의과대학이 조속히 신설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 1만 34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3일간 열리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는 의정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도민 생활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 잡으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특히, 약 14조 원의 규모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남이 나가야 할 방향을 같이 고민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도민께 약속드렸던 일하는 의회의 모습, 도민

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을 더 낮게 하고 전남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의회와 함께 해법을 찾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한 달여 기간이 남았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미래산업 경쟁력이 될 R&D를 비롯해서 농업 부문 등 여러 민생 예산들이 삭감되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을 위한 보람찬 의정활동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운영 성과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개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년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등을 청취했다.

또한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향토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17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밖에 주중섭 의원, 김호진 의원, 신민호 의원, 박형대 의원, 신익준 의원, 모정환 의원, 정철 의원, 박경미 의원, 이규현 의원, 이철 의원, 박종원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 현안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동욱 의장은 “올 한해 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협치를 기반으로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전라남도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주요 의안 처리 현황

의원 주요 입법 조례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진호건 의원(곡성)

제안이유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환경권보호 및 환경보전 의무를 위한

주요내용

-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도지사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또는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도지사는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이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기대효과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김재철 의원(보성1)

제안이유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및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복지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발달지연 영유아 현황, 발달재활서비스 등 복지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함
-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의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
- 도지사가 발달지연 영유아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지연 영유아가 가까운 제공기관에서 제때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함
- 발달지연 영유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도지사가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

기대효과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김성일 의원(해남1)

제안이유

- C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질병으로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함
- 이에 도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C형간염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감염된 사람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기대효과

도내 C형간염 감염자 중 저소득층의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기 치료가 가능해져 C형간염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김문수 의원(신안1)

제안이유

도지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대상을 인증제도 뿐만 아니라, 인증받은 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보급 및 확산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박현숙 의원(비례)

제안이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 교육감은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 교육감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학생의 산림교육 참여 지원, 관련 교원 연수 지원, 학교교육과정과 산림교육을 연계하여 운영, 필요한 사업비 지원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산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기대효과

학생대상 산림교육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최근에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산림교육이 더욱 주목받고 있어 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박종원 의원(담양1)

제안이유

아동 사망사고 1위가 교통사고인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안전승하차 구역 조성에 관한 내용 신설

기대효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윤명희 의원(장흥2)

제안이유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힘쓰는 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향토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향토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서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기업을 말함
 -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 나.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 다.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 향토기업의 심의, 인증 및 취소에 대한 사항 규정
- 향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기대효과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창업한 본고장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 동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를 제공하고 있는 향토기업을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육성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이동현 의원(보성2)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과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운영’ 조항, 그리고 지명심의를 위한 현장조사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함

주요내용

- 「공간정보관리법」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위원회 최대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정함(안 제3조)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7조)
- 지명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행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기대효과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3. 6. 11.)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전라남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김정애 의원(순천8)

제안이유

전라남도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익사업’, ‘미지급용지’,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 보상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보상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때 통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전라남도에서 사전 조사한 결과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하천 내 미지급용지는 약 14,765필지로 추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한숙경 의원(순천7)

제안이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보급하고,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 개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도의 공유재산에 점자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도록 함
- 도지사는 도의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공공기관에서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이 기대됨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김호진 의원(나주1)

제안이유

은퇴자 등 매년 4만여 명이 도내 귀농·귀촌 유입인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한 산림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이 도내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도내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림학교에서는 임업정책과 임업경영, 임산물·임가공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및 관리, 가공·이용, 유통·판매 등 포함한 청년 임업인 양성,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을 운영하도록 함
- 도지사는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산림학교 교육대상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귀촌을 희망하거나 임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기대효과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과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도내 임업 발전과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봄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모정환 의원(함평)

제안이유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위촉 위원 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청년농 등 농업인을 추가하여 농업인이 실감할 수 있는 농산물 선정 및 가격 산출 등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수와 위촉 위원 대상 확대

기대효과

위촉위원 수를 확대하여 품목별 농업인 및 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신민호 의원(순천6)

제안이유

전라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라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규정함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기대효과

2022년 말 기준 전국 벤처기업 수는 35,123개로 수도권지역에 64.7%에 해당하는 22,746개 벤처기업이 밀집돼 있고, 전남에는 1.9%인 664개 기업만 운영되고 있음. 또, 63.8%가 10년 이하 기업으로 자생력을 갖추 때까지 지원이 중요함. 조례 제정으로 도내 벤처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일 2023. 12. 13.

시행일 2023. 12. 21.



박경미 의원(광양4)

제안이유

아이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
-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과 우선지원 기준, 중복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

기대효과

성조숙증으로부터 모든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이철 의원(완도1)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도민이 발전사업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에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는 도민참여 수단 및 배율·사업자의 협력·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발전설비가 설치 될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집적화 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대효과

향후 도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관한 조례안

의결일 2023. 12. 07.

시행일 2023. 12. 28.



정철 의원(장성1)

제안이유

전라남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선포 및 교육 실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 관한 사항을 규정함

기대효과

전남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남체육의 진흥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요 의안 처리 현황

안건 처리 현황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총 75건

11. 01.(수) ~ 12. 13.(금) / 43일간



조례안 41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63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문성 의원 등 47명	12. 07. (12.28.)	다변하는 옥외광고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과 벽면이용 간판에 적용하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허용 범위 확대
650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2. 07. (12.2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23.6.16.)에 따라 조직개편 내용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에 반영
651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2. 07. (12.21.)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의 2024. 3. 1.자 학교신설·학교폐지·분교장개편·교명변경·주소 변경 사항 반영
655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진호건 의원 등 20명	12. 07. (12.28.)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고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전라남도민의 환경권을 보호
656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일 의원 등 50명	12. 07. (12.28.)	스토킹범죄 범위에 데이트폭력을 추가 및 구체화 명시하여 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발생 예방
657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수 의원 등 53명	12. 07. (12.2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주요 의안 처리 현황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658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2. 07. (12.28.)	도 및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659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2. 07. (12.28.)	「전라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660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2. 07. (12.28.)	「전라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661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12. 07. (12.28.)	「전라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669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진 의원 등 50명	12. 07. (12.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조례 개정
670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김재철 의원 등 54명	12. 07. (12.28.)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671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일 의원 등 49명	12. 07. (12.28.)	도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C형간염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치료비 부담 해소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672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 등 43명	12. 07. (12.28.)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존속기한 연장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673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옥 의원 등 10명	12. 07. (12.28.)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마련
674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수 의원 등 45명	12. 07. (12.28.)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대상 및 홍보 확대
67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현숙 의원 등 38명	12. 07. (12.21.)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 및 산림지속가능 보전화
676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원 의원 등 10명	12. 07. (12.21.)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677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명희 의원 등 51명	12. 07. (12.28.)	전라남도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678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등 53명	12. 07. (12.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3. 6. 9.) 관련 위임사항 조례 규정
679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김정이 의원 등 47명	12. 07. (12.28.)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680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락 의원 등 48명	11.27. (철회)	의용 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순직·공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도 제정
681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한숙경 의원 등 54명	12. 07. (12.28.)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신장 및 정보접근성 제고
685	전라남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형석 의원 등 51명	12. 07. (12.28.)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및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
687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식 의원 등 10명	12. 07. (12.2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 규정
691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	김호진 의원 등 50명	12. 07. (12.28.)	귀농·귀촌인 교육을 위한 산림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 이바지
694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희 의원 등 49명	12. 07. (12.28.)	시험·검사의 범위와 시험·검사의뢰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및 자구 정비
696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정환 의원 등 10명	12. 07. (12.28.)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촉 위원 대상 확대
697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2. 07. (12.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3. 8. 16. 개정) 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규정
698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2. 07. (12.2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3. 7. 18.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규정

주요 의안 처리 현황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700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	도지사	12.13. (12.28.)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 대응
701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종섭 의원 등 50명	12. 07. (12.28.)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공모전·홍보행사,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702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철 의원 등 46명	12. 07. (12.28.)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기관 확대
703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민호 의원 등 20명	12. 07. (12.28.)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
704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종 의원 등 48명	12. 07. (12.28.)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 추가 신설
705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서현 의원 등 34명	12. 07. (12.28.)	도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간연장 및 감면 대상지역 확대
706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등 47명	12. 07. (12.28.)	전라남도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70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박경미 의원 등 46명	12.13. (12.21.)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
709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이철 의원 등 54명	12. 07. (12.28.)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710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재태 의원 등 10명	12. 07. (12.28.)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와 보호활동 확대
713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철 의원 등 49명	12. 07. (12.28.)	전라남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

규칙안 1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699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위원장	12. 07. (12. 14.)	「지방공무원임용령」(23. 6. 13.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 점검사항 등 조례 위임사항 규정

예산안 4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68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12. 0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출
68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교육감	12. 1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제출
688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12. 07.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출
689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도지사	12. 13.	전라남도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제출

동의안 2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653	2024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교육감	12. 07.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의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654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감	12. 07.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 및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75%), BTL사업(25%)으로 추진 및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 추진

주요 의안 처리 현황

결의안 2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684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철 의원 등 10명	12. 07.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반적인 운용·관리 실태와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적극 수행 여부·추진상황·성과 등을 점검
692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대현 의원 등 10명	12. 07.	전라남도 노후 산업 단지 재생을 위해 기반시설의 현대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산업 입주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을 유도 촉구하는 대안 마련

건의안 15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662	섬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이철 의원 등 57명	11. 15.	도내 섬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한 의료분원 설치 및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촉구
663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	이재태 의원 등 48명	11. 15.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지원체계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 2024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삭감(최소 60% ~최대 100%)에 대한 정부 결정 철회 촉구
66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림문화자산 ‘고동산’ 개발 촉구 건의문	정영균 의원 등 48명	11. 15.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순천 ‘고동산’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거점(송광사, 선암사, 조계산 등)으로 활용
665	청각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모정환 의원 등 51명	11. 15.	청각장애학생에게 구화중심 교육, 교수·학습언어(수지한 국어)를 사용하는 교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 배치 및 양성을 위한 체계 개편이 필요
686	지방소멸 부추기는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문	이규현 의원 등 60명	11. 15.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국민의 힘 당론은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난 정책 중단 촉구.
690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박원종 의원 등 58명	12. 07.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보장 및 정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708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	김재철 의원 등 49명	12. 07.	댐 주변지역 환경변화와 주민건강 및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환경영향 조사가 필요
711	무제한 TRQ(저울관세할당)중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문	김문수 의원 등 48명	11. 15.	정부의 저울관세할당 수입 정책은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소득 및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제한 할수 있는 입법 촉구
712	의용소방대 설치 동 단위 확대 촉구 건의문	최명수 의원 등 47명	11. 15.	현재 의용소방대의 설치는 시·도와 읍·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동 단위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714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문	주종섭 의원 등 33명	11. 15.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보호 특별법 제정 필요
71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최동익 의원 등 48명	11. 15.	정부의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중단 결정 철회
720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문	신의준 의원 등 48명	11. 15.	전쟁, 전염병, 극한 기후 이상화, 에너지 가격 폭락 등의 국제 정세에 대비한 식량·곡물의 자급률을 확보하여 국민의 식량안보 보장
721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정철 의원 등 49명	11. 15.	고향사랑기부금의 지나친 제약 조건으로 모금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부금의 한도(500만원) 상향, 기부자의 거주지역 기부 등의 제도 개선 건의
722	고사 위기 국산 고추 산업 육성책 마련 촉구 건의문	한춘옥 의원 등 51명	11. 15.	중국산 냉동 고추의 낮은 관세로 인해 국내 건고추 산업이 위태로워 건고추 산업 육성책 마련 촉구
723	신혼부부 주택 마련 대출 소득요건 폐지 촉구 건의문	임형석 의원 등 46명	11. 15.	신혼부부의 초혼연령(남자 33.7세 및 여자 31.3세) 합산 평균소득이 주택마련 대출 소득요건을 웃돌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선정 추진

2023. 11. 01.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종섭 의원(여수6)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수려한 해안 절경이 환상적인 ‘백리섬섬길’의 제1호 국가관광도로 선점을 위한 전라남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6일 김희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관광도로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여수시민과 지역사회가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리섬섬길’은 여수에서 고흥 간 거리인 100리에 섬과 섬을 잇는 바닷길이라는 의미로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광과 각각 다른 독특한 공법이 적용된 교량들이 어울려 교량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구조물이 더해져 전국에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객 1억 명 유치와 해외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위한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이라는 목표로 작년과 올해를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올 한 해만 해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국제 수목비엔날레, 전국체육대회 등 전남 곳곳에서 굵직굵직한 큰 행사를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성 행사와 축제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백리섬섬길’이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이 된다면 남해안남중권 해양관광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전남의 지속적인 지역 관광자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노르웨이,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선 경관이 우수하거나 역사, 문화 등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드라이브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리섬섬길’의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은 단순히 순서상의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넘어서 고유의 상징성이 부여될 것이며 앞으로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 및 사도~남도 간 생태탐방 관광자원, 여수 여자만 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전남의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선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 미래를 위협하는 농부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2023. 11. 01.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호진 의원(나주1)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천년고도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촌 미래를 위협하는 농부증 환자 증가에 따라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2/4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령화 속도 역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여파는 농촌지역 소멸위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가인구는 217만 명 수준으로 2002년 359만 명에 비해 20년 동안 40% 가량 줄었습니다.

더욱이 농가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보고되며 이러한 요인은 농부증을 겪고 있는 농가인구 증가라는 아픈 현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부증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축적된 육체적·정신적인 장애증상입니다. 지금은 60세 이상 농민들 가운데 농작업 관련 질환을 겪지 않는 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농업은 농부증 발생률과 농기계 사용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건설업, 광업과 더불어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이 8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인정하는 질환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와 기업은 일찍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보다 고령화로 늙고 노쇠해 아픈 것이려니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우리 사회는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작금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만 51세 ~ 70세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지만 조족지혈(조족지혈)로 이제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문가들은 농부증을 농작업 특성상 없어질 수 없는 질병이므로 증상의 조기 발견과 농촌 질환에 맞는 재활 치료 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통계관리도 하지 않고 관련 의료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부증 예방 및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본격화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가장 근본적인 산업입니다.

2022년 기준 전남의 농가인구는 30만 명에 이릅니다. 전남도가 앞장서 지역별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재활시설 확보 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농업인들의 건강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전남도가 농업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 미래발전 원동력인 글로벌대학교와 RISE 사업 연계 방안 필요

2023. 11. 15.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신민호 의원(순천6)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국립순천대가 전남의 미래발전 원동력인 글로벌대학교에 최종 선정된 것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순천대학교가 글로벌대학 본지정이 된 것은 김영록 지사님과 공직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천대학교가 예비지정이 되고 전라남도는 순천대학교와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서 제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도의회에서는 지산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과 의회와 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15개 대학 중에 지자체 지원 방안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보여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

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 문제,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문제,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강진군은 주민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 7000만 원을 들여 빈집을 수리해 1만 원에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출생아 1명당 월 60만 원씩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군은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좋은 교육여건, 좋은 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복지, 교육이 있는 전라남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는 RISE 시범지역이고 이번에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완성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글로

컬대학과 RISE사업의 철저한 연계 방안이 필요합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산학 캠퍼스 구축과 강소기업육성대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본 의원은 그런 점에서 첫째,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결국 교육, 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지원할 것인지, 둘째, 향후 글로벌대학과 RISE 사업의 연계 성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국립순천대학교 지산학 캠퍼스 조성에 전라남도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넷째, 지자체, 대학, 산업계를 어떤 방안으로 연결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완성할 것인지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만의 경쟁력으로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발전하는 전남 대도약의 시대를 준비해 나갑시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적극 동참·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계로 응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실효성 정책 수립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2023. 11. 15.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형대 의원(장흥1)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는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12월에는 최종 보고를 마치고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절차이지만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다른 무수한 정책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국제적 협의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이런 흐름에 동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후퇴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마저 기후위기를 조장한 대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도 내용과 수립과정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하고 감축 대책 및 대응 기반 구축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의 근본 변화 및 실효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기존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전남도정의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야 하지만 그러한 진지한 물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

직 온실가스 발생과 감축목표 수치를 늘여놓고 예산서 세입·세출 잔액을 0으로 맞춰 놓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산업과 에너지 부문은 정부 계획 범위라 하더라도 전남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업들에 대한 책임과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재난을 정의롭게 분담하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탄소중립일까 의심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수송 분야 감축 계획의 핵심은 전남 대중교통의 활성화임에도 이에 대한 점검과 대안은 없고 전기자동차 구입과 트램 도입 등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도 에너지 약탈 농업과 대농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 가족농이 지구를 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입 등 원거리 농산물이 아닌 지역 농산물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정책의 변화 없이 시설원에 지원 등이 탄소중립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겨우 부문별로 명시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시설 확대가 구색을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산림녹화로 수치를 손쉽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문 중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몇 가지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뿐 아니라 민주적 합의과정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이 선언한 전남의 대전환도 무엇보다도 이 탄소중립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계획은 기후 관련 사업부서의 협소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남도정에 온전히 스며들어야 하고 전남도청 모든 실국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전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맞게 도정을 총괄하는 사업부서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종합업무를 담당할 탄소중립추진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후정치라 할 정도로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곳에서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되고 기존 방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후위기를 이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난개발과 자본증식만 번창하고 있고 신중 기후약당이 양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라남도의 기본계획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이해 당사자 및 환경 전문가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미래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 필요

2023. 11. 15.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신의준 의원(완도2)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라
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
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 분야
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인구가 많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이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산물 직거래법’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국가는 지역농
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
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지자체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
기관의 농산물 이용 현황은 법 제정 이후에도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16곳 가운데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70%에 못 미치는 곳이 총 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제로로 아예 없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구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의 대량 구매처인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등은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전남도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해 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위해서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산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2019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구매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만 비계량적인 지표이다 보니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공급처 발굴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감, 실천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도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이 같은 저조한 참여상황을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실적에만 머무른다면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은 결단코 제자리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이용률 상향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물가와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국민 소비도 위축되면서 지역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앞장서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해서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200만 도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워진 전남의 지명을 되찾자!

2023. 12. 07.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정환 의원(함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향과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본의원은 일제강점기 이후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녹아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일본 식 지명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명은 수십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려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땅 이름에는 우리만의 정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전통 등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소중한 우리의 땅 이름을 자신들의 침략 야욕과 수탈에 유리하게 대대적으로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른바 창지개명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 훨씬 이전에 일제는 18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행위 중에 우리의 바다, 산, 마을을 살살이 축량하고 이를 지도화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14년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우리나라 지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창지개명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지명을 되찾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변경된 읍·면·동 지명을 바로잡는 작업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일본이 우리 고유의 정서와 민족의 식 말살 차원에서 강행한 '창지개명(創地改名)'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로 '일본이름지우기'라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경기도

는 경기도내 398개 읍·면·동 중에 40%에 해당하는 160곳이 당시 고유의 지명을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로 합니다.

지명이 변경된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두 지명에서 한 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표적인 합성지명 사례로 성남시의 둔서촌, 양현리, 통로동 등을 병합하면서 한 글자씩 판 성남시 서현동입니다. 이 외에 일제가 식민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 등을 사용해 변경한 사례는 29곳이 되고, 기존 지명을 삭제한 후 한자화한 지명도 3곳이 있습니다. 또한 지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향토정서가 왜곡된 사례도 있으며, 안성시 일죽면이 대표적입니다. 일죽면은 죽산군을 폐지하며 남일면, 남이면, 북일면, 북이면, 제촌면을 안성군의 죽일면으로 만들었고, 죽일면이 듣기에 따라서는 욕설로 들리기 때문에 죽일면은 이듬해 일죽면으로 변경되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함평군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제강점기 때 바뀐 지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엄다면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원래 지명은 엄다산면이었습니다. 구산리라는 마을은 구산에 구자가 거북 구자인데 이를 아홉구자로 일제는 바꾸어 버렸습니다. 큰 유학자 곤재 정개청이 살아 거제동이라 불렀던 마을은 크다라는 거자를 일제는 빼버려 지금은 제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2019년부터 일본식 지명 등 사용실태 일제조사에 나서 일본에 의해 한자가 왜곡된 일본식 지명 40개를 정비하여 현재 11개의 지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인공지명에만 해당되고 우리가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행정지명의 정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대대적으로 바꿔 버린 우리 전라남도의 지명을 해방된 후에도 바로 잡지 못하였기에 지금이라도 “우리 전라남도도 경기도에서 실행한 것처럼 본래 우리 지명을 찾아 복원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전통을 복원하고 살려내어 일로, 전라남도 관계공무원들과 도지사님의 행정적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잔디산업,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2023. 12. 07.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정철 의원(장성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디의 메카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당초 목표 관람객 800만 명보다 많은 9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한 마디로 서울 인구가 통째로 다녀간 셈입니다.

본 의원도 직접 박람회장을 방문했는데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탁 트인 시야와 온통 푸른 잔디로 덮여져 있어 녹색이 주는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가 잔디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잔디는 옥수수, 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입니다. 한국잔디학회에 따르면 전 세계 잔디산업의 시장규모는 80조 원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1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잔디 그 자체로도 부가가치 높은 작물이지만 잔디 생산, 시공, 조경, 재료 및 장비 등 연관 산업까지 고려하자면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높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환경부 표토보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 평균 토양 유실량은 연간 1헥타르(ha)당 32톤인데, 지표면을 잔디로 피복한다면 토양유실을 크게 경감하

고 객토와 준설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잔디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 대기 오염물질 제거 등의 기능이 뛰어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육박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1980년대 초반 장성에서 처음으로 잔디재배가 이뤄졌고 현재 장성을 비롯한 무안과 나주 등에서 전국 잔디 생산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의 폭발적 증가, 정원문화의 확대, 도심 속 잔디공원 조성 확대 등으로 잔디 활용이 증가하면서 국내 잔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와 달리 잔디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잔디 품종개발·생산·품질·조성 및 사후 관리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제도, 전문 교육·연구기관과 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또한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잔디 종류별 재배면적, 출하량, 생산량, 재배 농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통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잔디식재 수요량 등 관련 산업 규모에 대한 증장기 연구용역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잔디 품질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유통구조

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잔디 품종 개량 및 생산 기술 연구 개발은 물론 생산자단체에서 요구한 잔디품질등급제,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의 제도를 검토·보완하여 생산자의 소득 보전·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잔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험·관광·교육·홍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까지 가능한 친환경융복합 잔디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잔디산업 발전은 민간 영역에서 전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서삼석·신정훈·이개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잔디산업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도가 주축이 되어 잔디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마련·시행으로 잔디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기 단계별 체계적 성교육 확대 촉구

2023. 12. 13.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박경미 의원(광양4)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연령별 수준에 맞는 학교 성교육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 중 대표적으로 n번방과 같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성교육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잘 구성된 성교육은 성 건강을 유지하고 성별 간의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은 성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육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공교육에서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중심으로 많은 힘을 쏟아 학교 현장에서는 성교육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전남 소재의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상반기 기준 약 2천 건으로 2021년 약 3,500건과 2022년

4,200건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중 성폭력 발생은 올해 상반기에만 216건으로 2021년과 2022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생들의 왜곡된 성문화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범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성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작년부터 꾸준히 다음 세 가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에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인지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 및 확대하여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의 성교육은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은 시대적·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 중 성교육은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단계별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성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방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인 초기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교육의 한계와 부모를 위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점에서 학교 중심의 강의식 성교육을 넘어 가족 단위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체험을 통해 성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성교육지원센터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장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성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늦지않게 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교육청,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도, 농지 중심 농업보조금 지원 전면 개편 이뤄져야

2023. 12. 13.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규현 의원(담양2)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도 내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마땅히 고른 보조금 혜택을 받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전면 개편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각종 농업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수혜농가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만 해당 농가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비 100% 및 현금성 지원사업인 공익직불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은 농가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다르더라도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누락되지 않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분야 사업의 경우에도 축산업 등록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원예 등 여러 작물의 경우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설하우스 등 원예 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 지원사업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예산 부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소지 기준을 고수하면서, 타 자치단체 주소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한 분은 화순군 백아산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는 불과 2~3km가 채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농업인이 거주 자치단체 구역 내에 농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구입이 쉽지 않고 임차 등도 어려운 상황이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직불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위장·허위로 되어 있는 현실이라 농지 자체가 부족한 여건 속에서 새롭게 조건에 적합한 농토를 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농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인접 시·군에 농지를 확보하였지만 하우스 시설 등에 대한 보조지원이 안 된다니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에서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직불금 지급이나 축산시설 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농지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이 차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만 인접한 지역에 대한 범위를 인접한 면으로만 한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전남 도내 우리 농토에서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농지의 소재지가 자치단체를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

지 않도록 농업분야 모든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이 엄연히 구분되고 그에 따른 사무가 다르기에 개편에 따른 장애요인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결국 전국 최대 농도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여타 지역까지도 사전 협조체계를 제대로 갖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점차적으로 농토 중심의 보조금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보조금이란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도민이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전남도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하게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의 불멸의 우정 청산도에 진린도독비 건립을 통해 선양해야

2023. 12. 13.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철 의원(완도1)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해양관광·해양역사가 살아 숨쉬는 치유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저는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이 걸리는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도에 발자취를 남긴 명나라 진린 도독과 이순신 장군의 우정을 기리는 '진린도독비'를 청산도에 건립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필요한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1592년 4월 시작된 임진왜란은, 일본군의 부산포 상륙 이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군을 이끌고 일본과의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조선 수군의 승전과 명나라의 참전으로 일본군은 수세에 처하게 되었으며 명나라와 일본의 5년에 걸친 강화회의도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발발한 정유재란 참전을 위해 진린 도독은 병력과 함선을 이끌고 이순신의 고금도 진지와 조금 떨어진 묘당도에 본영을 두었고, 명나라 수군의 안녕과 승전을 기원하기 위해 묘당도에 관왕묘를 건립했습니다. 관왕묘는 우리나라 관우 사당 중 유일하게 수군이 건립하고 군신인 관왕과 함께 해신 마조신을 모신 의미 있는 사당으로, 현재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무사로 변천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4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을 돕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진린 도독과 이순신 장군은 깊은 우애를 나누며 네 번의 전투를 함께했습니다. 고금도에서 조명연합수군을 형성해, 금당도 앞바다에서 왜구 27명의 목을

베고 배 6척을 침몰시킨 금당도 전투를 시작으로, 고금도에서 30km 떨어진 절이도까지 출전해 안택선 50여척과 왜구 1만 6천여명을 물리친 절이도해전, 순천왜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왜구를 섬멸하기 위해 고금도에서 무려 120km에 달하는 거리를 출정해 왜선 30여척을 침몰시키고 3천여명의 왜구를 살상한 예교해전,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7년 전쟁을 끝낸 전투이자 이순신 장군 생애 최후의 해전인 노량해전 등의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하였습니다. 진린 도독은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을 묘당도 월송대에 안치하고 직접 제문을 지어 장례를 치루고, “큰 별이 바다에 떨어져 잠졌다”며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1644년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가 망하자 진린 도독의 유언을 받든 손자 진영소는 관왕묘가 있는 고금도로 이주하였으며, 현재 해남군 산이면 황조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의 깊은 우애에 대해 2014년 서울대 강연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7년 중국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도 청산도에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의 사이가 매우 돈독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린도독비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에서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가승」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표출자료 올림]

표출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헌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원문과 번역문입니다. 현재 청산도에 있어야 할 ‘진린도독비’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사라진 상황입니다.

[표출자료 내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완도 고금도는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이 연합수군을 결성해 함께 왜구를 무찌른 출발지이자, 전쟁의 승리와 평화를 기원한 관왕묘가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또한, 완도 청산도는 고금도 외에 연합수군의 활동 장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진린도독비’가 있었던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완도는 외세 침략에 항거한 두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에 청산도에 ‘진린도독비’를 건립하여 중국 및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을 알리는 역사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고려 없는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 남발 중단해야!

2023. 12. 13.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박종원 의원(담양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소외되고 있는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정책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도 1690억이 편성되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정책은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본 사업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업체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사용 비중이 51%로 가장 높았지만, 이에 반해 전통시장 등 중소요통경로의 비중은 36%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원인은 쿠폰의 할인방식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계산대에서 바로 할인이 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앱을 다운받거나 온라인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쿠폰을 발급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령층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에서 모바일을 이용해 할인쿠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상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낮은 정책입니다.

결국 농수산물 할인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할인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은 더욱 늘어나는 반면 전통시장의 방문은 더욱 감소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욱이 할인쿠폰 사업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해당 부처는 단순히 대형마트의 매출만 집계하는데서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은 애써 수확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본 취지와 상반되게 할인가격에 맞춰지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더이상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예산이 대기업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도 전남’이 나서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미비점과 전남도에 미칠 여파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건의해 관철시켜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위주로 할인쿠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어업인들에게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커지는 상황에 단순히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민과 전남도 그리고 의회가 함께 농어업인을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 » 제376회 제2차 정례회(2023. 11. 01. ~ 12. 13. / 43일간) :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기타 4건
 - 202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전라남도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위 구성 등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4년 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차영수)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11.01.~12.13.) 기간 동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의 자치법규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활동 지원업무, 사무처 인사 및 조직 운영,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현황 등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한 결과 권고 6건, 건의 1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단 국제교류 시 실현가능한 목적과 내용을 담아 사업 추진 ▲도의회 대변인의 활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개편, ▲의원 연구용역비 증액, ▲정책지원관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확대 등이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질의와 꼼꼼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도의회의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전라남도의회 의 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행정위원회

» 제376회 제2차 정례회(2023. 11. 01. ~ 12. 13. / 43일간) : 조례안 6건

- 전라남도 방법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남북교류협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별 활동 현황



신민호 위원장(순천6)

지방소멸 막을 골든타임, 위기 극복 대응책 마련해야

전남은 유소년과 청년층 비율이 2008년 57.8% 였던 것이 현재는 42.2%로 정반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장년과 노년층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 비율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금 당장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인구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격상시킬 것을 주문함.

(2023. 11. 06,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정철 부위원장(장성1)

지적·적발 위주보다는 문제 개선을 위한 감사 주문

도 전체 공유재산 중 폐교, 폐건물 등 방치된 시설이 많음. 감사관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목포시 의과대학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같이 지적·적발보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활용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 바람.

(2023. 11. 01.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차영수 의원(강진)

감사처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속히 이행해야

강진의료원 특정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잘못 지급한 도민의 혈세는 조속히 환수 할 것을 시정조치함. 또한 감사

추진시서류로만 확인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보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며 소홀함 없이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당부함.

(2023. 11. 01,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전경선 의원(목포5)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부족 염려

전라남도 내년도 세입 부족분을 5,000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 원임. 순세계잉여금이 없어 어떻게 내년도 추경 예산 재원을 마련할지 염려스러움. 내년도 추경

재원 마련은 물론 향후 3년 이상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2023. 11. 15,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



강문성 의원(여수3)

여수~남해해저터널영향분석·대응방안 연구용역 주문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사업은 동서지역 화합과 경제적 확장 가능성 등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전남 특히 여수지역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 및 지역산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도 큼. 심층적

인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전남도와 여수시가 협력해 추진할 것을 주문함.

(2023. 11. 23,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시)



전서현 의원(비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내실있는 운영 요구

20년 전 시작된 정보화 마을의 지속적인 예산 감축과 시스템의 노후화 및 폐지, 운영인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스마트 시대에 흐름에 발 맞춰 사업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자립할 수 있는 더 활용적인 방안 모색 주문.

(2023. 11. 20, 기획조정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신승철 의원(영암1)

전라남도 청년인구 지속 유출과 매년 되풀이되는 청년지원사업 한계 지적

전남에서 매년 1만여 명 안팎의 청년인구(18~45세)가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정책으로는 전남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신혼부부가 아이를 네 명을 낳는다면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후에도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2023. 11. 03,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주종섭 의원(여수6)

여수 여자만 생태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고 고흥, 보성, 순천, 여수 4개 시군이 협력하여 여자만 생태갯벌을 유네

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함.

(2023. 11. 07,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임형석 의원(광양1)

실질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효율적 정책 실시 요구

현재 전라남도에 시행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 중 도민이 원하는 주거와 관련된 사업은 전체의 4.4%에 불과하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분야보다 하드웨어 조성에만 치우쳐 있어

사회지표를 반영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실시를 제안함.

(2023. 11. 03,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시)



박원중 의원(영광1)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 요구

전남 대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에 지역 활력 프로젝트 추진 시 전라남도에 부족한 육아나 보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청년

세대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의 시행을 제안함.

(2023. 11. 03,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제376회 제2차 정례회(2023. 11. 01. ~ 12. 13. / 43일간) : 조례안 8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별 활동 현황



최선국 위원장(목포1)

환경산업진흥원, 감사전담기구 설치하고 제도 정비해야

최근 5년간 진흥원의 예산은 387%, 인력은 36%가 증가했지만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나 제대로 된 기구가 없음.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진흥원 자체 제도를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함.

(2023. 11. 02,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

전남 탄소중립 전략 재검토 해야

정부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이 14.5%에서 11.4%로 줄이면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전남은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됨.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국책사업 유치를 건의하고 지역 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고비를 죄는 일에 전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함.

(2023. 11. 03,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서대현 부위원장(여수2)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최적의 방안 도출 요구

여수산단 대기 측정값 조작 사건 4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거버넌스 권고안에 따른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비 26억 원에 대한 기업 부담금 납부 약속서를 받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며 앞으로 설치할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함.

(2023. 11. 03, 제376회 제2차 정례회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내년 추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확대 요구

지역 보육의 사각지대를 책임지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처출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 증가로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유보통합이 실현되기까지 최소 어린이숲체험 현장학습비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 존폐 위기에 놓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할 것을 요구함.

(2023. 11. 22,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김성일 의원(해남1)

모국어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등 제도적 장치 모색해야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제공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음에 다문화 요양보호사를 적극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급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

(2023. 11. 06,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남도 조속히 설치해야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5개소, 한부모 가족은 7,463세대(총 19,010명)에 달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없다며 예기치 않는 출산으로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2023. 11. 07,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시)



오미화 의원(영광2)

지역의 토양조건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 및 조림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주문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심어진 경제수종을 지역의 토양 조건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하고 전남 조림 사업을 전수조사해 지역 토양에 맞는 적절한 수종에 대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고민 필요함.

(2023. 11. 03, 제376회 제2차 정례회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치매치료관리비 전 도민 확대 약속 지켜야

2024년도 예산안에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을 60세 이상의 전 도민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정부 지원과 똑같이 변동 없이 계상되어 있어 발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함.

(2023. 11. 21,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김정희 의원(순천3)

전남형 '지하수 관리 메뉴얼' 마련해야

지하수 수위 하강은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보조수위측정망을 확대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규제함은 물론 급격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메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2023. 11. 03,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경계선지능인 대책 마련 필요

경계선 지능인은 ADHD,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 은둔형 외톨이와 연결돼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전남도가 컨트롤타워로서 교육청과 협업해 경계선지능인의 조기발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23. 11. 06,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최미숙 의원(신안2)

섬지역 의료인프라와 응급의료 개선 대책 마련해야

섬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이송 수단 출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섬 응급환자가 민간 나르미션이 아닌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이 갖춰진 헬기나 선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섬 지역의 의료인프라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섬 맞춤형 응급의료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2023. 11. 06,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시)

자립준비청년 단계별 교육·지원 강화하고 사후관리망 철저히 해야

전남 자립준비청년 중 33%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반 국민 기초생활수급 비율의 7배에 달하는 수준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한 단계별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망을 철저히 하여 공적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동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람.

(2023. 11. 07,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시)



김희식 의원(장성2)

산불진화 헬기 노후화 심각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남의 산불진화용 헬기의 기령은 모두 20년 이상으로 노후화율이 심각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헬기를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령에 따른 검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2023. 11. 03,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히 할 것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로 인한 자상사고가 많고 순천의료원의 경우는 사고당사자에 미화원도 포함되어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임. 자상사고 예방과 의료폐기물 분류 및 보관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함.

(2023. 11. 08, 순천-강진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김재철 의원(보성1)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실시해야

스토킹, 보복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폭력 피해자는 물론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23. 11. 07,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응급환자 재이송 최소화 대책 마련 및 응급의료 예산 확대해야

하루 한명 꼴로 응급환자가 재이송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환자 중증도를 제대로 분류하는 등 재이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바람.

(2023. 11. 06,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김미경 의원(비례)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카드 허위결제 등 부정수급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예방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사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으로 적발된 활동지원사의 활동제한, 자격제한 등 제재를 강화는 방안 마련과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2023. 11. 06,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상향 요구

전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지원 금액은 아직 충분치 않음.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 퇴소자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금의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함.

(2023. 11. 07,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김호진 의원(나주1)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4년간 고작 10건

전남에는 어린이집 949개소, 경로당 9,212개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많은데도 지난 2021년부터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 운영결과 10건의 실적과 그에 따른 대행업 등록을 말소는 소극적 관리 운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실내공기질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기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주문함

(2023. 11. 02,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약자 위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해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조

(2023. 11. 03,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제376회 제2차 정례회(2023. 11. 01. ~ 12. 13. / 43일간) : 조례안 10건

-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위원별 활동 현황



이철 위원장(완도1)

전라남도 유배기념관 건립 필요성 제기

한양에서 거리가 멀고 산골과 섬이 많아 유배지로서 최적의 장소였던 전라남도에는 유배라는 백척간두에 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학과 예술이라는 꽃을 피운 선조들의 다양하고 풍부

한 유산이 남아있음. 이에 역사적 인물들이 유배 생활을 하며 남긴 유산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용역과 유배문학을 발전·계승하기 위해 유배기념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함.

(2023. 11. 22, 2023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본예산 심사)



이재태 부위원장(나주3)

전라남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시행해야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체육회가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전국 17개 시도중 9개 시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중에 있음으로 내년부터는 체육회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2023. 11. 23,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



김태균 의원(광양3)

전남테크노파크, 청년창업가 육성해야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중 청년창업가 비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청년 일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청년창업가에 대한 기초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청년창업가 TP 우선 입주 등 TP에서 실행가능한 청년 정책을 제안함.

(2023. 11. 08,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이광일 의원(여수1)

전남예술인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 자격 기준 제안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예술인만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이에 전라남도만

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분야별 예술인 자격기준을 부여해 전남 예술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2023. 11. 09, 2023년도 전라남도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최병용 의원(여수5)

도내 투자유치 협약이행률 높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올해 9월 기준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맺은 투자협약 규모는 77개사 6조 6,586억 원이지만 협약은 실제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지난 민선 7기에 맺은 투자협약 이행률이 5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대책마련이 필요함.

(2023. 11. 07,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윤명희 의원(장흥2)

수목비엔날레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 요구

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파견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인 수목비엔날레의 개최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격년제로 개최되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재단 소속 수목비엔날레 지원팀의 필요성을 강조함.

(2023. 11. 14, 전라남도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나광국 의원(무안2)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급증추세,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기조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중복 보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남신보의 대출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작년 대비 각각 180억,

129억 늘어 544억 원과 339억 원이 되었음. 향후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단계별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2023. 11. 07,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최정훈 의원(목포4)

민생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하여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도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예산 유지가 필요성을 주장함.

(2023. 11. 22,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류기준 의원(화순2)

전남 취약계층 연탄사용 세대 연료 전환 시급

전남지역 연탄 사용 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LPG

등의 연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

(2023. 11. 02, 에너지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한숙경 의원(순천7)

지역예술인에게도 도립미술관 전시 기회 제공해야

도립미술관의 국내외 유명작가 위주의 전시 탓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에 놓인 지역작가들은 작품 전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

고 있어 지역예술인들이 도립미술관에서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 확대 지원을 제안.

(2023. 11. 08, 문화융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제376회 제2차 정례회(2023. 11. 01. ~ 12. 13. / 43일간) : 조례안 5건

- 벌교~낙안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순천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목포소방서 및 목포 도시가스(주) 현지조사
-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등 5건

위원별 활동 현황



이동현 의원(보성2)

만원 주택 내실있는 사업방향 검토

전라남도 만원 주택 사업에 대규모 사업비 (2,843억 원)가 투입된 만큼 사업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지역주민,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을 주문함.

(2023. 11. 07,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임지락 부위원장(화순1)

추수철 산불 예방 및 대응 기간 확대해야

화재 예방 대응이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추수 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 예방진

화대의 운영 기간을 초겨울 까지 확대하여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2023. 12.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김문수 의원(신안1)

전남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등 지원 확대해야

재난현장 활동으로 각종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심신안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부족함. 심리상담 수요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비대면 심리상담실의 도입 요구함.

(2023. 11. 21.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사)



최명수 의원(나주2)

소방차 진입 사각지역 해소 위한 드론 도입 서둘러야

고층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하여 영상드론과 화재진화용 드론이 함께 운영되도록 소방드론 도입이 필요하고, 특히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소방 약제를 활용한 화재 진화용 드론, 인명구조용 드론 등 화재 및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함.

(2023. 11. 06.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



이현창 의원(구례)

‘빛속 콘크리트 타설’ 대책 마련 필요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라 만연하게 우중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

고를 막기 위해선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함.

(2023. 11. 07,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박문옥 의원(목포3)

단기간 행사에 대형예산 ‘2024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실질적 교육 효과 볼 수 있어야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2024글로벌 미래 교육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전남

의 아이들과 타 지역 간의 교류, 경험, 체험 등이 박람회 기간 동안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체험학습 기회 확대 등 실질적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함.

(2023. 12. 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김인정 의원(진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시행 주문

장애인 주거환경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체·시각·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특화된 맞춤형 주택개조를 요구함.

(2023. 11. 07. 2023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김정이 의원(순천8)

소방력 강화를 위해 전남형 소방정비창 설립해야!

소방력은 결국 소방관과 장비로 이루어져 있고 소방장비의 관리 개선은 화재진화와 직결되는 만큼 수준 높은 정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비 특채 인력 8명이 소방서별로 흩어져 정비

와 장비 관리 공유가 어렵고 숙련자로부터 교육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한곳에 모아 운영할 수 있는 전남형 소방정비창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2023. 11. 06.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손남일 의원(영암2)

도시재생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운영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함.

(2023. 11. 07.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



김주웅 의원(비례)

뒷북 행정으로 도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적극행정 주문

도민안전공제보험 중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300만 원) 항목이 2023년 1월부터 반영됨.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광주광역시는 2021년, 전라북도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에 반영되어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시기에 항목이 추가되어 해당 시·도민들이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음. 다른 지자체 경우처럼 적극행정 (2022년 도내 코로나 사망자 843명)을 했더라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25억 2천만 원)이 주어졌을 것임.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주문함.

(2023. 11. 08.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

» 제376회 제2차 정례회(2023. 11. 01. ~ 12. 13. / 43일간) : 조례안 4건

-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패류양식 신규대체 품종 현장방문 등

위원별 활동 현황



신의준 위원장(완도2)

어민을 지키는 수산물 안전 대책개 마련 주문

이상 기후에 따른 고수온에 대한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뉴얼 마련 및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어려운 상황일

수록 해양수산과학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함. 또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문

(2023. 11. 06, 행정사무감사 시)



박선준 부위원장(고흥2)

연안정비사업 '친해양공법' 적극 도입 주문

해양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안정비사업은 콘크리트 기반시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는 인접지역의 2차 피해, 유지·관리비용, 탄소흡

수, 생태계 보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 시 친해양소재로 바꾸어 탄소중립 실천에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2023. 11. 09, 제37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강정일 의원(광양2)

‘청정 바다’ 만들기 위해 바다 정화 사업 지속해야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며 해양환경 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바다정화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음.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자체에게 바다정화 사업을 떠맡면 바다 정화 사업을 도외시 할 수 밖에 없기에 예산 지원을 건의

(2023. 11. 23, 2024년도 해양수산물 소관 예산안 심사 시)



한춘욱 의원(순천2)

벌 스마트사육시설로 증식 주력 주문

‘벌 스마트사육시설’은 내년부터 실증되는 신규 사업으로 월동 벌통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벌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만큼 활발히 활용하여 꿀벌 증식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

(23. 11. 24,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정길수 의원(무안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해야

전남도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58%를 생산하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 현재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양식장, 도매시장 등 계통 판매되는

곳을 대상으로만 방사능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고,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는 비계통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를 요구

(2023. 11. 06,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 시)



이규현 의원(담양2)

행정사무감사 “남도장터 본연의 역할·기능 당부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판매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할인쿠폰 등 포인트 관리미흡, ▲비효율적 홍보

마케팅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과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함

(2023. 11. 02,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최동익 의원(비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핑크 발생을 이유로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액 전액을 삭감시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짐이 지자체로 떠넘겨지게 되었음. 이에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과 사업 종합지침을 농촌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함.

(2023. 12. 07, 제3차 본회의 시)



정영균 의원(순천1)

내년 예산 미반영된 비료비 지원사업 꼭 추진돼야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국비삭감으로 예산이 미반영된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도자체 사업으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만약 내년

부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면 비료가격이 올해의 40%이상 상승하여 농가들의 경영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업비 증액 요청함.

(2023. 11. 27,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모정환 의원(함평)

연구자 의욕 고취를 위한 “연구성과 보상책 확대 방안” 주문

내년도 농촌진흥청 국가R&D(연구개발)예산 25%, 전남도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37% 이나 삭감되었는데, 줄어든 연구개발 사업비에

연구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우려됨.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상대책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

(2023. 11. 28,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진호건 의원(곡성)

소규모 미곡처리장 지원 확대 운영 요구

미곡처리장(RPC)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일반 RPC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 미곡처리장(RPC) 설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RPC는 시설 노후와, 운영 등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규모 RPC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을 주장

(23. 11. 27,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시)

교육위원회

» 제376회 제2차 정례회(2023. 11. 01. ~ 12. 13. / 43일간) :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고시안 1건
-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위원별 활동 현황



조옥현 위원장(목포2)

전통시장 화재사고 대비 철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지역소멸위기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3개 지역을 묶어서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광주인근 지역은

대도시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하는 등 여러 안을 검토하여 우리 지역이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023. 11. 14.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김진남 부위원장(순천5)

'순천 강남여고'... 이익이 아닌 교육에 힘써야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 학습공간 조성 등의 사유로 학교 부지 이전 절차 강행과 관련하여 공간보다 교육과정이 더

중요하고, 교육 상향 평준화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 등이 먼저임을 지적하며 강남여고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피해가 없도록 주문함.

(2023. 11. 14.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송형곤 의원(고흥1)

전남 폐교 재산 56개교 매각 시급

전남 도내 폐교 839교 중 739교를 매각했으며 자체 활용을 제외한 56교를 매각 예정임. 폐교 건물은 건물 유지비용 발생과 청소년 우범지역

이 될 우려가 있어 폐교를 시급히 매각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2023. 11. 14.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박성재 의원(해남2)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진로·진학 선택권 확대해야

저소득층 학생 운동선수들의 지원에 힘써야 함. 또, 운동을 그만두고도 제2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학생운동선수들의 진로 및 진학을 위해

노력해야 함. 학생 운동선수가 체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우수한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복지 지원 강화를 주문함.

(2023. 11. 02.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최무경 의원(여수4)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해야

전라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물품 구매 현황(1천만원 이상)을 분석한 결과 물품 구매 계약업체 805곳 중 516곳이 타 지역업체로 69.9%를 차지함. 지역경제 활성화

화를 위해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지적함.

(2023. 11. 14.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박종원 의원(담양1)

“깨어있는 교실”을 위한 공존교실 내실화 촉구

공존교실 운영에 대해 명확한 매뉴얼 개발과 보조강사의 역량 강화 대책을 주문. 공존교실은 중학교에 수업을 보조하는 강사를 배치해 학습

중에 개별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고 교과교사와 함께 협력수업을 진행 하는 사업으로, 박종원 의원은 공존교실의 성과를 위해 보조강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함으로 보조 교사 간담회와 연수 등도 필요함을 강조함.

(2023. 11. 02.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박현숙 의원(비례)

전남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해마다 증가

전남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함. 박현숙 의원은 기후위기가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소재가 바로 급식임을 강조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기호 반영, 우수 사례 소개 등 학교와 교육지원청별 노력이 병행되길 주문함

(2023. 11. 06.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장은영 의원(비례)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부정 수상,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2021.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부정 선수 수상과 관련하여 영광 모 초등학교 및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

함. 당시 부정으로 획득한 21개의 상장에 대한 회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하나의 의심조차 남지 않게 철저한 조사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함.

(2023. 11. 14.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박형대 의원(장흥1)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전남교육청의안인한 대책 지적

2027년이 되면 전남 초등학교 학생수가 21.6% 감소하고, 59.8%가 작은학교로 남게 됨. 학령인구 절벽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조례에 정한

작은학교 살리기 기본계획마저 2019년 수립한 이후 한 번도 세우지 않고 있는 등 전남교육청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길 주문함.

(2023. 11. 02.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박경미 의원(광양4)

전라남도 일자리정책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 해야

성교육은 집단교육보다는 학급단위 교육이 더 효과적이며, 전남의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력해 외부전문가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

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청 자체 성문화교육센터 구축 운영이 필요함.

(2023. 11. 14. 전라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서동욱 의장



서동욱 의장은 10월 2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을 통한 좋은 조례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들을 살펴 장애인들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동욱 의장은 11월 3일 무안군종합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 제40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석 “전남 소방의 안전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의용소방대원의 대응 능력 향상과 상호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동욱 의장



서동욱 의장은 11월 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높이 퍼져라 전남의 소리'를 주제로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회 개최식에서 참석하여 "선수 여러분 모두와 한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국민 대통합의 스포츠 대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서동욱 의장은 11월 7일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된 배추소비에 위한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에 참석하여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 농민이 가꾼 배추의 소비와 더불어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동욱 의장



서동욱 의장은 11월 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진로교육 박람회 개최가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찾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최선의 진로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욱 의장은 11월 9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전남 마을공동체 한마당에 참석, 마을공동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동욱 의장



서동욱 의장은 11월 10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수고하신 농업인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은 11월 10일 고향을 방문한 광주전남시도민회를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전반기 전라남도의회 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지에 계시면서도 지역 인재 육성 지원 및 의대 유치 등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는 향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태균 부의장



김태균 부의장은 11월 8일 동부청사를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행정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부지역본부 행정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새롭게 개청된 동부청사의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11월 23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해단식 참석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자원봉사자들을 치하하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전경선 부의장



전경선 부의장은 11월 10일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한 '2023 지역아동센터 봉사자 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하여 연합회에서 그동안의 지역 아동복지 등을 위해 공헌한 바를 인정하여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협력할 것을 밝혔다.



전경선 부의장은 12월 7일 아름다운가게 해당점을 방문하여 전라남도의회 ESG실천을 위한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사랑의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과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귀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차영수)는 11월 22일에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등 의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2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을 방문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현장을 확인한 의원들은 체육시설 개선, 도민 참여형 교육·행사 확대, 지역별 접근성 개선, 역사 교육 발굴 등을 지적하며, 교육기관으로서 도정 전문성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
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희)과 공동으로 12월 15일(금) 전라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2023년 제2차 노인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전남의 초고령사회 대응,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의 현황과 노인일자리 창출 방향성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의 고령화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고령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관광
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철)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라남도 동부청사 개청을 맞아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문화융성국에 대한 첫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타당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현)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일, '별교~낙안' 지방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동현 위원장은 낮은 공정률을 지적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 도민들의 불편 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현)는 지난 11월 2일 목포소방서와 목포도시가스(주)를 방문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동현 위원장은 “이번 현지조사가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서가는 선진 소방행정을 펼쳐갈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현)는 12월 11일 여수시 유탑 마리나 호텔&리조트에서 전남 청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동현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의 주거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면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지역에 적용할 부분들에 대해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1월 7일 고흥해역 개체굴 양식현장을 찾아 종자 생산부터 양식 현장까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현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바다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등을 모색하여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1월 7일 고흥 녹동농협에서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급불안과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마늘 재배농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소득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1월 27일 ‘제2차 전라남도 해역 분쟁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대응 진행상황을 살피며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11월 10일 장성 삼계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학교 급식 시설, 설비 노후화 정도 및 관리 실태 등을 둘러보고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전국 최초 부사관 고등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남도와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수)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도와 교육청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228억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8억 원,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97억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14억 원 등 신규사업 증액예산을 포함한 12조 5,75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9일 도교육청 심사에서는 ICT활용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66억 원,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 등 연도 내 필요한 주요 사업에 145억 원 증액분과, 교부금 감소에 따른 주요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 지원 △1,266억 원,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19억 원, 다목적강당 개보수 23억 원 등 3,885억 원을 삭감한 교육비특별회계 4조 8,835억 원 예산을 원안 가결 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금번 추경은 도나 교육청의 세수 감소에 따라,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재차 확인했다”며, “열정적으로 심사 활동을 해주신 위원들과 도청, 교육청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와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건전 재정 운영을 기조로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에 중점 심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수)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間に 걸쳐 전라남도과 전라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도내 인구소멸지역의 빠른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중앙부처 건의 주문, 출산 장려금 기준 정립을 통한 전남형 인구 정책 요구를 비롯,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청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등 집행부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420억 원과 ▲전라남도 청년 비전센터 건립 103억 원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성액을 수용하는 한편 ▲도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7억 원 등 41건 129억 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분담금인 ▲학교 식품비 지원사업 14억 원을 추가 증액, 국비 지원이 중단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24억 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4억 원 ▲담주변 환경 기초조사 용역 1억 원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4천2백만 원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93건에 129억 원을 최종 증액 의결했다.

또한, 도교육청 심사에서는 쟁점사항으로 ▲전남학생수당 사업 552억 원과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58억 원은 집행부 편성액을 반영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내 학교 출입통제 시범 사업인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구축 10억 원, 전화통화 녹음을 위한 ▲민원응대 소통지원 28억 원 편성액 중 일부인 16억 원 등 11건, 177억 원을 삭감하고, 공립·사립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민원면담실 구축 10억 원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 보조 8억 원, 초·중·고등학교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 10억 원 ▲교육 현장 여건 개선 45억 원 ▲대안교육 기관 지원 2억 원 등 44건, 16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여성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숙)는 '전라남도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정책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12월 1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했다. 박현숙 위원장은 “양성평등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로 성별 관계없이 공평한 권리와 기회를 함께 누리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다”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 우리 전남이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폭력 예방, 일·가정 양립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댐 환경 특별위원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영균 의원(순천1), 부위원장에는 김호진 의원(나주1)을 선출했다.

댐 환경 특별위원회는 도내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댐 주변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노후산업단지 특별위원회



노후산업단지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서대현 의원(여수2), 부위원장에는 최정훈 의원(목포4)을 선출했다.

노후산업단지 특별위원회는 서대현 의원 대표 발의로 전남의 노후화된 산업 주변 환경 및 각종 재난·사고 대응체계 구축과 기업의 ESG 경영 활성을 촉구하고 방안을 마련코자 구성됐다.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정철 의원(장성1)을 부위원장에 박경미(광양4)를 선출했다.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의 15개 기금 등 전반적인 운용·관리 실태와 고유목적 달성도를 점검하여 개선코자 구성·설치되었다.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태)는 11월 15일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기업인들과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2024년도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산정책 발전연구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동익)는 11월 22일 기후변화에 따른 남해안 해양생태계 변화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촌 발전연구회



농촌발전연구회(대표의원 정영균)는 12월 12일 의회 초의실에서 '청년 창업농의 지역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박종원)는 12월 13일 '전라남도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분석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대표위원 주종섭)는 12월 7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전남지역 여야 4당은 11월 2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전남의과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남 여야 4당 위원장과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소속 도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공동협약서에 여야 4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전남의 국립의과대 신설을 위해 12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도의원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양 의회는 현재 전남의 열악한 의료상황과 국립의과대학의 유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 의회가 협력하여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연구회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임지락)는 12월 12일 전남도의회 상임위실에서 전라남도의 해상교량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안전성·경제성·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라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 제도정비를 통해 교량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자치분권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원중)는 12월 13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공공갈등 현황 및 해결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박 대표의원은 공공갈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역사 관광연구회



남도역사관광연구회(대표의원 나광국)는 11월 24일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전남 명산 발굴과 섬진강과 영산강 영향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전남ICT문화관광 콘텐츠진흥연구회



전남ICT문화관광콘텐츠진흥연구회(대표의원 김호진)는 12월 13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하여 ALC(Active Learning Classroom) 등 핵심시설을 탐방하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캠퍼스 구축 계획 등을 청취했다.

농수축산업관광 자원화연구회



농수축산업관광자원화연구회(대표의원 이광일)는 12월 1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 강연회는 한식미식관광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태희교수가 ‘전남지역 미식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의원동정



최선국 위원장(목포1)은 11월 17일, 함평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열린 ‘제14회 영산강·섬진강 한마당’에서 5대강 유역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조례’와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물관리 분야에 애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2월 8일, ‘2023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 분야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제안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옥현 의원(목포2)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특별포상을 수상한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5월 교육자치 조례 중 전국에서 최초로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에스지(ESG) 교육과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ESG 방향성 제시와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박문옥 의원(목포3)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5회 2023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1대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제12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례 발의 10건과 건의안 2건, 3회에 걸친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정훈 의원(목포4)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직원들과 함께 목포 신천호 시장에서 ‘ESG 경영실천을 위한 친환경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환경 살리기에 적극 동참했다.



이광일 의원(여수1)은 12월 6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과 1유형 편입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전남영어회화전문 강사·김진남 교육위 부위원장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약 100여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정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서대현 의원(여수2)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경로식당에서 가진 ‘2023년 따뜻한 겨울나기 「정성과 사랑이 담긴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직접 담은 김장김치는 지역의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 1,200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12월 13일, 무등일보가 주최한 ‘제7회 무등 행정대상·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무등 행 의정대상에서 서 의원은 미래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교원 기준을 법정 기준 ’학생 3명당 특수교사 1명’으로 완화 할 것을 건의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문성 의원(여수3)은 11월 29일 여수시 여서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우리동네 김장 나눔행사’에 참여했다. 여서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관내 독거 어르신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계층 9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행사로 주민센터 공무원 및 지역 통장단, 부녀회 등 50여 명과 함께 김장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최무경 의원(여수4)은 11월 3일(금)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전남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최 의원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직업재활종사자들의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동정



최병용 의원(여수5)은 11월 18일 ‘제11회 섬섬여수 그란폰도 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자전거를 활용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최 의원은 “자전거 타기가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체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중섭 의원(여수6)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진행된 시전동주민 센터 앞에서 열린 시전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 50여명과 주중섭 의원이 함께 김장김치 담갔으며, 저소득 취약 계층 141가구에 전달했다. 주중섭 의원은 “매년 추운 날씨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장김치 나눔으로 인해 취약계층 분들이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순천1)은 12월 12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피해저감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 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 의원은 제12대 농수산위원회 위원, 전남도 농촌발전연구회 대표의원로 활동하면서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춘옥 의원(순천2)은 12월 6일, 14일에 김장철을 맞아 지역구인 순천시 별량면, 도사동에서 진행한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으며, 이날 담은 김치를 지역의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정희 의원(순천3)은 12월 13일, 휴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7회 무등 행정·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혁신비전 부문 의정대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조례’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진남 의원(순천5)은 12월 7일(목)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으로부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에 참가하여 아낌없이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1박 12일 동안 158개 나라 4만 3천 명의 세계청소년들이 참여한 축제인 잼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더불어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신민호 위원장(순천6)은 11월 29일 여순사건 유해발굴사업 현지 참관을 했다. 여순사건의 구례 보도연맹원 집단학살지로 추정된 담양 옥천 약수터 인근에서 유족회와 여순사건지원단, 중앙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유해발굴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 지원 확대와 진실규명을 위한 속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숙경 의원(순천7)은 10월 30일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에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 전남 지역 본선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숙경 의원은 축하사에서 "앞으로의 미래 꿈나무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나라에 큰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이 의원(순천8)은 11월 23일 KBS순천 라ियो 시사초점 전남동부입 니다에 출연해 '섬 많은 전남, 가칭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4차 용역이 진행 중으로 3년 용역기간이 끝나면 용역사에 유지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고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해 감당하기 어렵고 도내 교량도 늘어나고 있어 교량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가칭)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이 유리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알렸다.

의원동정



김호진 의원(나주1)은 11월 14일 (사)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한 ‘제3회 전라남도 산림환경대상’ 에서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호진 의원은 도민들에게 폭넓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육성 기반마련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였다.



11월 1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년 활력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현 정책에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은 자금 확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커 기업 확대 및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창업 전주기 프로세스 지원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최명수 의원(나주2)은 전남소방본부 주최로 11월 3일 개최된 제40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서 나주 의용소방대를 방문 격려했다. 이날 최 의원은 “나주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향상하고 인구밀집 지역인 신도시에 洞(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태 의원(나주3)은 12월 7일 ‘2023 희망한국 국민대상 지자체 의정부 문 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과 촉구건의안,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 등이 지자체 의정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상했으며, “앞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형석 의원(광양1)은 12월 14일 지난 4월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간 위수탁 계약시에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교류를 시작한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탁업체인 삼동회와 함께한 2023 송년한마당 자리에 참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정책의 시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강정일 의원(광양2)은 12월 7일 수협 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강정일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위원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선에서 수산업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경미 의원(광양4)은 12월 11일(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23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경미 의원은 올해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습결손 학생의 적기 해소 및 학습부진 예방 마련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종원 의원(담양1)은 12월 9일(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3. 전남 작은학교 교육박람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박람회에는 ‘생생공감 작은학교, 로그인(LOG-IN)’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남 교육 대전환의 희망이 담긴 작은 학교의 꿈과 미래를 보여주는 한마당 행사로 펼쳐졌다. 박종원 의원 “전남 작은학교의 희망을 발견하는 귀중한 행사이다”며 “작은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 강소학교’로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호건 의원(곡성)은 12월 12일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업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 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2월13일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의원동정



이현창 의원(구례)은 ‘2023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전지킴이를 행정리마다 위촉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 응급구조 활동 등을 수행한다. 최근 자율적인 사전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도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형곤 의원(고흥1)은 12월 12일(화) 고흥교육지원청 Wee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2024 고흥교육 변화와 희망’ 대토론회에 참석해 “작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성과 경험을 위해 많은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고흥군이 시골이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시골아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에게 많은 해외체험을 제공해 다양한 경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준 의원(고흥2)은 12월 12일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 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재철 의원(보성1)이 11월 23일 방송된 LG헬로비전 <이슈토크-호남>에 출연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나 전남의 시·군에 기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현 의원(보성2)은 ‘벌교~낙안’ 지방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지 조사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서 2023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종 시설물 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살펴봤다. 이동현 위원장은 벌교~낙안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낮은 공정률을 지적하고 사업 기간에 맞춰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신기교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및 유지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임지락 의원(화순1)은 11월 11일 국제언론인클럽(GJC), 대한장애인복지신문, (재)기부천사클럽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자랑스런세계인대賞’에서 ‘지역꿈나무발전공헌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임 의원은 입안활동으로 지역꿈나무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화순군의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선정에 참여하여 지역 의료꿈나무들에게 교육환경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비책, 청소년 마약투여 관련 정책 제언 등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보호하는 정책 제시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기준 의원(화순2)은 11월 27일 화순군 능주면을 찾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에 참여해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류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언제든지 신속하게 복지기동대와 함께 출동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대 의원(장흥1)은 12월 1일(금)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도민 이익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공영화 지원 및 공존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과 증진사항을 보고받고, 태양광 분야 지역갈등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동정



윤명희 의원(장흥2)은 지난 11월 27일 도의회에서 ‘향토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 힘써온 향토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영수 의원(강진)은 11월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전남도의회가 지방의회 주요 현안을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논의·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영수 위원장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긴밀히 소통해 지방의 현안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일 의원(해남1)은 11월 7일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2023년 배추소비 촉진을 위한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에 참석하여 한여농 회원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재 의원(해남2)은 11월 22일(수) 수산정책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따른 남해안 해양생태계 변화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함께 하였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장애인·노인에게 효율적인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도 있게 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신승철 의원(영암1)은 12월 13일 영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영암군 농민회 통일쌀 나누기 전달식 행사에 참석했다. 2007년부터 매년 통일쌀 경작지에서 쌀농사를 지어 나눔 행사를 지속해오고 있는 영암군농민회를 격려하고, 남북교류가 검색된 상황에서 민간단체에서 변함없는 남북화합을 위한 단절 없는 노력이 평화통일을 향한 역사의 흐름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남일 의원(영암2)은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 공동 주관으로 12월 13일 열린 '제7회 무등행정·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손 의원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위험도로 개선과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아우토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길수 의원(무안1)은 지난 11월 17일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인 남악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식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길수 의원은 “남악 청소년 문화의집이 앞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재능과 꿈을 키워나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국 의원(무안2)은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맨발 걷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으며, 최근 전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 걷기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원동정



모정환 의원(함평)은 11월 21일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주재로 이상익 함평군수, 윤영량 함평군의회회장, 모정환전남도의원, 현장과온라인으로 참여한주민등 200여 명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원종 의원(영광1)은 12월 5일 영광군 청년공동체 ‘유별난 안터마을’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여 청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체 결성 이후의 후속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활동공간에 대한 지원책 및 청년들이 정착하며 지내는 동안 느꼈던 점들을 자유롭게 논의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오미화 의원(영광2)은 11월 14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농업생산비 폭등, 농가경제의 대책은 있는가?’를 주제로 농업인단체와 함께 긴급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업생산비 지원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도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생산비 지원 대책을 세워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정철 의원(장성1)은 10월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잔디산업 활성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하여 잔디산업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장성군이 공동주최하였고 장성군수, 도의원, 산림청, 전라남도, 학회, 주민 등이 참여했음



김희식 의원(장성2)은 11월 10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들의 화합과 농정 성과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은 어려워진 환경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희망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의원(완도1)은 11월 20일, 소안~구도 연도교 개설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보길·노화·소안간 생활권 단절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비법정 도로였던 송지~노화읍~소안간 구간(25.7km)이 지방도로로 승격되어 국비와 도비 등 재원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며, 26년 완공 예정이다. 앞서 이철 의원은 소안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소안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을 11대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신익준 의원(완도2)은 12월 7일 소회의실에서 어업인 복지 증진과 어가 안정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협 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제12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12월 13일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경영의 합리화와 권익 신장, 풍요로운 복지 어촌 건설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제12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철폐 촉구 건의안,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등 수산업 종사자의 현장 맞춤 문제 해결과 소득증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인정 의원(진도)은 11월 1일 진도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8회 진도군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민 체육대회와 기념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및 군민 2천여 명이 진도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전날 축하의 밤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군민과 함께한 각종 행사들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원동정



김문수 의원(신안1)은 지난 12월 7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2023년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정치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11대·12대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남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과 수산물 소비대책 TF팀 구축 등 농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미숙 의원(신안2)은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농어촌취약지 병원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취약지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다.



12월 7일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회장 정승현)가 주최한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정치부문 ‘의회활성화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과대학 유치대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박현숙 의원(비례)은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2월 7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제12대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학생 교육환경개선, 소외계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장은영 의원(비례)은 10월 25일(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수 강사 확보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남교육의 질 제고를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남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 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관기관·대학·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김주웅 의원(비례)은 제7회 무등 행정대상·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도민 안전과 노인복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으며, 심도 있고 다양한 분야 연구를 위해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강진만의 패류감소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에 최우선으로 매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서현 의원(비례)은 10월 25일 강진군 시전면 사초리 해상에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함께 어린 보리새우 종자 약 100만 미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서현 의원은 “보리새우 치어들이 강진 앞바다에서 잘자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산자원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비례)은 10월 2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진행된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을 통한 좋은 조례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고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등일보 주최로 12월 13일 열린 ‘제7회 무등 행·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12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남도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편의증진 계기를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 및 인권보호 개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국민건강증진법

2021. 12. 21. 일부개정, 시행 2023. 12. 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역간의 기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정의하고 각국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비롯한 신종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2. 12. 27. 제정, 시행 2023. 12. 28.

제정이유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주요내용

-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지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둠(제5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갖추고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 역량 심의를 요청함(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 해지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측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성과 측정·평가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제13조).

교육 미래를 향한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과 기회

박선준 의원(고흥2)

2023년10월27일자 남도일보



우리 기성 세대는 어릴적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들으며 자랐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올리면 성공이 보장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맹목적으로 공부를 했고 난 부모가 되어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을 똑같이 전하고 있다.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군과 교육의 모습 또한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직업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25년 1면 AI가 글로벌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무려 1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엔 1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칸 베네딕트 교수팀은 오는 2040년쯤 되면 현존 직업 중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7세 어린이들 중 68%는 기술 진보로 인해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 교육 체계 또한 적응하고 변화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남도 역시 교육 환경과 인재 양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의 교육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된다. 이 혁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새로운 직업의 등장을 가져오기에 이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존 교육 방식이 지식 전달 중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을 주체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키고, 협업과 토론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학습 및 교육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이미 다수의 교육 업체들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콘텐츠 보급으로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의 실력을 진단·점검하며 학업 성취도와 취약점까지 파악하는 등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AI를 공교육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혁신과 개선을 이끌어내는 핵심적 단계이다.

셋째, 교육은 미래 일자리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AI와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과학,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능력, 윤리적 판단력 등의 역량은 미래 직업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력을 지닌 학생들은 미래 직업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엘빈 토플러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지났으므로 그럭저럭한 산업화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육은 과연 그 물음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처럼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우리 교육 체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중심의 교육방법, 개별 맞춤형 교육, 역량강화 그리고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미래의 도전과 기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교육기관,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 체계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 세대에게 빛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변화와 혁신을 기다리고 있다.

신체활동은 건강퍼즐이다

최선국 의원(목포1)

2023년 11월 6일자 남도일보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장 대중적인 신체활동이 있다. 바로 국민체조이다. 1977년에 만들어진 국민체조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 보급되었다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까지 30년이 넘도록 실시됐다. 한창때는 관공서는 물론 각 학교 운동회나 중간 체조 시간에도 일제히 국민체조를 했을 정도이다. 아직은 그 아성을 넘는 대중체조가 없다.

80년대 이전 세대들은 “국민체조~ 시작!”이라는 구령만으로도 생물학적 세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다음 동작이 떠오른다. 쉬워 보이지만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솟는 이 훌륭한 전신운동은 남녀노소 모두의 체력과 정신건강에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내며 대한민국의 건강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우리에게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워 준 계기는 코로나19 대유행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인류사회 전체의 행동패턴과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까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전후 성인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체활동, 아침 결식 등 건강행태 지표는 악화되고 정신건강,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그 무엇보다 신체활동 부족을 비만과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의 한가지로 분석했다.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에너지 소비를 요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인을 기준으로 일주일당 최소 150분의 중등 정도 또는 75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살펴보면 23.5%에서 21.0%로 2.5% 감소하는 등 신체활동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라남도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우려된다. 2022년도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전남도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40.1%로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후자는 시도별 오차범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남도민들의 바쁜 삶을 대변하는 반사판 통계치인 듯해 들여다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평소 규칙적 운동을(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필자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이번 달에 공포·시행되며 전라남도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전남도 내 곳곳에 신체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비만 예방 및 관리 위한 비만관리사업,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작이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마중물이 되어 전남도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남도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과 관련된 유·무형 기초 인프라 구축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저녁 무렵 전남도의회 앞 중앙공원을 지나다 보면 키보드를 타는 어린이, 배드민턴을 함께하는 부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추는 동호회원들, 회식 후 거닐고 있는 직장인까지 각자의 방법으로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온전히 안녕한 삶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되어줄 건강을 위해 일상 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바야흐로 운동의 계절이다. 국민체조로 스타트를 끊는 것도 좋다. 운동화 갈아 신고 가벼운 몸짓으로 신체활동을 시작해 보자.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주중섭 의원(여수6)

2023년 11월 9일자 무등일보



인간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그 사회의 공동체성과 인권,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 존중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배제가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 조치다. 이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이 노동자들이다. 대량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거리에는 실직노동자와 노숙자들이 줄을 이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 차관을 빌려야 하는 조건으로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와 파견법이 시행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대량 실직, 상시적인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자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노동자와 국민의 희생과 동참으로 IMF 경제위기를 초기에 극복했지만,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권리인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해고를 당했고, 노동조합과 해고를 당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77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회사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회사에 제안도 했지만, 사측과 정부의 혹독한 탄압이 진행됐다. 이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날아들었고 현재까지 22명의 쌍용차 노동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2000년 두산중공업은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고 나서 1천명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했고,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2002년 임단협 협상 중 47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배달호 노동자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후 2002년 연말에 복직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 됐고 배달호 노동자는 이에 항거 단조공장 클링타워 앞에서 분신했다.

2003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주익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화와 너무나도 가혹했던 150억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압류였다.

지난해 거제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자가 1평도 안 되는 철창틀에 들어가 옥쇄투쟁을 진행하고 51일간 파업을 진행 합의한 뒤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던진 것은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

쌍용차 사태, 두산중공업 배달호 노동자,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자, 거제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은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소송으로 여전히 노동자들을 옥죄면서 진행되고 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보장되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교섭과 쟁의가 어렵다는 다는 것이 한국의 노동실태다.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의 절실함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과 처절함 그 자체이다. 손해배상압류와 원청 사용자성 회피로 얼룩진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위법하다며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적인 권리는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근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의 범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현시기 최대 민생 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의 최후 기본권을 억압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의 개정을 통한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노동 약자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국격에 맞게 즉각 입법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설움’, 농부증을 아시나요?

김호진 의원(나주1)

2023년 11월 13일자 광남일보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그러나 보통은 빼빼로데이가 가래떡데이가 더 익숙할 것이다. 농촌의 상황이 이렇다. 오죽하면 빼빼로데이에 가려진 농업인의 날을 알고자 정부에서 가래떡데이를 추가로 명명했을까 싶다.

‘농부증’이란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경하다. 농부증은 농업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을 묶어서 부르는 의학용어인데 증세는 대략 8가지이다. 어깨결림과 요통, 손발 저림 등 근골격계와 야간 빈뇨와 호흡곤란, 불면증, 어지럼증, 복부 팽만감 등이 있다. 이에 속하지 않지만 피로와 스트레스 축적도 농부증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농촌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이 이 농부증이다. 농부증의 증세를 호소하는 농업인은 많지만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이들은 거의 없다. 많은 농업인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빈곤한 생활이나 농사일이 바빠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오랫동안 아픔을 참다가 손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농부증은 천천히 다가와 농업인들을 한순간에 쓰러뜨린다고 해 ‘보이지 않는 칼’이라 일컬어진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헤아려볼 만하다.

사실 농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인정한 3대 위험 업종 중 하나이다. 농업분야 재해율은 2020년 기준 0.81%로 전체 산업평균 0.58%의 1.4배에 이른다. 농촌진흥청의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농민 176만 6219명 가운데 업무상 질병으로 하루 이상 휴업한 농민은 8만8138명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이 84.6%로 가장 많다. 흔히 삭신이 쭈시고 결린다며 호소하는 병이다. 농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작업 환경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장시간 근무, 반복적인 동작이나 불편한 자세, 과도한 짐이나 중량물 취급 등이 질병을 유발·악화하는 요인이다.

농약과 미세먼지도 치명적이다. 농약은 두통, 피부 가려움이나 농약 중독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약 중독은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신경계 질환, 치매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또 미세먼지는 곡물·짚 등으로 인한 분진과 농기계 배기가스, 축사 내 암모니아·곰팡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농업 관련 질환들은 초기에 치료를 소홀히 하고 장기간 방치하면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재해율 또한 어느 산업 종사자들에 못지않게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익숙한 증상, 익숙한 고통으로 치부하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농업인들이 많다.

이에 전남도 일부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농부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원 정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유의미한 시도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그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약 102만 가구에 이른다.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의 본격화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금,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산업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재활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의 ‘1111’은 네 개의 일자가 모인 형태로 수확한 곡식이 가득한 창고를 상징한다. 가득 찬 창고는 비단 물질의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농업인들의 건강한 삶을 채울 정책과 시스템이 가득찬 창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1111’의 모습일 것이다. 마음으로 기리고 진심으로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이 되도록 더 깊은 정책적 고민은 이어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환영하면서

신민호 의원(순천6)

2023년11월13일자 광남일보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의 미래 발전 원동력인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것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순천대학교는 지역의 주력·미래첨단산업

과 연계한 인재육성, 진학-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높은 벽들을 무너뜨리고 대학과 기관 간 벽을 허물며 지역발전 전략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지역 산업체-대학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체, 대학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다 함께 잘살고 발전하는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질병 등으로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가 대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겪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대학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우리 전남만의 경쟁력으로 지방소멸이라는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로 응비하는 전남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게 할 것이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 현장평가 등에서 발로뛰는 행정의 열정을 보여주신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산학 캠퍼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시장, 군수, 전남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주신 소병철·서동용 국회의원, 그리고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전남도민 여러분, 기업 관계자 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다시 한번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남도의회는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부문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대학이 지역발전과 혁신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완성하는데 노력하겠다.

11월 22일 ‘김치의 날’ 세계적 기념일로

신익준 의원(완도2)

2023년 11월 15일자 전남매일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2020년 제정된 ‘김치의 날’은 우리나라 대표 식품관련 법정 기념일이다. 김치는 배추, 무 등 주재료로 마늘, 젓갈 같은 양념 재료 하나하나(11)를 모아, 발효 과정을 거쳐 향산화, 항암, 항비만 등 건강에 좋은 기능이 22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김치의 특성과 효능을 11과 22라는 숫자에 대입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다.

미국에서도 ‘김치의 날 결의안(H. Res 280)’을 미연방 하원에서 올해 4월 발의해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서 상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아르헨티나는 지난 7월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브라질 상파울루시, 영국 런던 킹스턴 어폰 템스 왕립구도 각각 6월과 7월에 김치의 날을 제정 및 선포했다고 한다.

김치는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 발효식품이다. 김치의 식물성 유산균은 거의 100% 생존해 장까지 도달했다는 조사결과가 일본 TV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한국의 신김치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또 코로나 발생 후 김치 효능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면서 지난해 김치 수출은 1억5천991만 달러로, 작년보다 10.7%나 증가했다. 영국 수출은 44.7%나 증가했으며, 독일은 39.3%, 미국은 22.5%, 대만과 일본에서도 각각 17.8%, 12.7%가 늘었다. 우리 김치는 현재 전 세계 8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K-푸드의 대표식품인 김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울 푸드이자, 자랑거리다.

하지만 김치를 둘러싼 터무니 없는 논란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중국의 ‘파오차이’, 일본의 ‘기무치’ 등이 해외시장에서 김치의 기원을 흐리게 만든 탓이다. 그럼에도 김치의 날을 다른 국가서 공식 기념일로 인정한다는 것은 김치라는 ‘K-푸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한국 고유의 전통 발효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김장철이 다가왔다. 2013년 유네스코가 ‘김장’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김장’은 길고 다채로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아무도 그 정확한 유래를 모르지만,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의 ‘장에 담근 무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순무 겨울 내내 반찬 되네’라는 부분을 보아, 김장의 역사 역시 천 년을 훨씬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장과 김치는 한국의 몇몇 저명한 문인들에게도 영감을 줬다. 특히 정약용(1762-1836)은 “서리 맞은 농작물이 마치 축 늘어진 김치 이 파리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도 김장 물가에 대한 우려가 깊다. 정부는 김장 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농산물 약 1만1천톤과 천일염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위해 올해 245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김장의 중요성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전통적인 김장방식은 배추를 하루 동안 소금물에 절인 뒤 물기를 완전히 빼고, 무, 마늘, 고춧가루,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등 갖은 양념 재료를 만들어 김치소를 배춧잎 사이사이에 고루 펴 넣은 고된 일들이다. 번거로운 과정으로 대부분 공동체로 모여 작업이 이뤄지곤 했다. 김장은 많은 정성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김장 품앗이로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핵가족화된 요즘 김장은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는 절임 배추, 양념까지 일체를 배송하는 김장 키트, 1인용 김장 에디션 등 김장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과거처럼 가족 여럿이 모여서 가족행사를 치르는 김장은 어렵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김장김치를 직접 만들어본다면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김치를 빼고는 한국인의 밥상을, 한국의 음식문화를 논할 수 없다. 오는 11월 22일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많은 국민들이 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

전남을 맨발 걷기 특화지역으로 만들자

나광국 의원(무안2)

2023년11월24일자 전남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 방영한 이후 집 근처 공원이나 등산로에는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맨발 걷기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맨발길 조성과 부대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전북에서 최초로 공동주택과 도시공원에 맨발길 조성과 세족대 설치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후로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67곳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맨발길 조성 장소도 도시공원에서 등산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곳곳에 맨발길이 우후죽순 조성되고 방문객도 늘어나는 추세다. 영광의 물무산 맨발황톳길은 올해 4월 개장 이후 7월까지 2만6천명이 방문했으며, 순천에서 지난 9월 개최한 ‘어싱데이’에는 25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순천만국가정원에 조성된 맨발길을 걷기도 했다.

이 외에 목포 양을산, 여수 오동도 맨발공원, 화순 남산공원을 포함하여 도내 22개 시·군 곳곳에서 맨발길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필자의 지역구인 무안에서는 물맞이 치유의 숲길과 남악철도변 어싱길, 자전거공원 어싱길이 조성돼 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고 곳곳에 맨발길이 조성되면서 이제는 맨발 걷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현재 ‘맨발 걷기 정책’은 기초 지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맨발길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광역지자체에서는 경우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기초 지자체별로 분화된 맨발길 조성 기초를 존중하면서도 광역지자체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남을 맨발

걷기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주민 건강증진과 관광객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난 11월 6일 전남도와 무안군 관계 공무원,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지역주민이 참가한 ‘전라남도 맨발 걷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박동창 회장이 맨발 걷기 체험 사례를 발표하고 실제 한의사로 활동하는 동료의원인 조옥현 교육위원장이 맨발 걷기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해 강연한 뒤, 이어서 패널들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치열한 논의의 시간을 거쳐 도출한 결론은 주민들이 맨발 걷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에 맨발길을 조성하자는 것과 전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맨발길을 조성하여 전남을 맨발 걷기 특화지역으로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전국 비중의 10.9%(686ha)와 42.5%(1053.7㎢)를 차지하는 산림과 갯벌 면적, 그리고 몸에 좋은 게르마늄이 가득한 황토는 다른 지자체는 갖지 못한 전남의 특장점이다. 이를 활용하여 도내 권역별 숲길, 해안, 공원 곳곳에 특색있는 맨발길을 조성한다면 주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전남도의 소극적인 태도였다.

지금처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민원 대응의 일환으로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에 그친다면 시간이 지나 맨발 걷기의 인기가 시들해진 후 도내 곳곳에 조성된 맨발길은 홍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을 맨발 걷기 특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예술 섬 나오시마를 가다

강문성 의원(여수3)

2023년12월6일자 전남매일



지방소멸 시대 지역의 재생과 부활의 성공사례를 찾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나오시마 섬을 다녀왔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섬들은 문화적 변화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중 나오시마 섬은

대표 성공지역으로 일본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가가와현에 속해있다. 인구수 4천여명의 작은 도시에 연간 수십만명이 다녀가고, 3년마다 열리는 베네세 트리엔날레 기간에는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든다. 주민소득 7만불로 가가와현 전체에서 소득 1위를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주민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섬이다.

현재 전남은 일본과 비슷한 다도(多島)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경제적으로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 해안지역 및 지역구인 여수 등 남해안권이 비슷한 처지에 몰린 상황에서 섬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고심해왔기에 여수지역 문화예술인들, 전문가와 함께 이번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은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

나오시마를 가기 위해서 거치는 다카마츠 공항에 도착해보니 소박하지만 알찬 공항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인구 45만여명의 다카마츠는 정결하고 깨끗한 도시로 나오시마 섬을 찾기 위해 일본 전역뿐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었다.

나오시마는 일본의 에도시대에 해운업과 제염업으로 번성했고 이후에는 미쓰비시 구리 제련산업으로 번영했으나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도시가 쇠퇴하고 오랫동안 희망이 없는 잊혀왔던 섬이다.

그러다 1985년 당시 나오시마 시장인 ‘치카츠고미야케’라는 정치지도자가 출판사 ‘후쿠다케 서점’의 ‘후쿠다케 테쓰히코’ 회장을 만나 나오시마 섬이 부활할 수 있도록 적극 구애해 설득에 성공했다.

이후 회장의 별세로 좌초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이듬해(1986년) ‘베네세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출판회사 베네세 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공익자본론을 강조하며 “

노인만 남아 있는 섬에 천국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버려진 나오시마 섬에 도시재생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고, 이후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주민 소통과 설득을 통해 오늘날의 나오시마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일본의 개념건축가인 ‘안도 다다오’를 찾아가 프로젝트 추진 제의를 하고, 버려진 섬에 세계적인 건축미술인 ‘지중미술관’을 설계했다. 또 전기 인상파의 대부 ‘모네’의 ‘수련’작품 및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등 다수의 명작을 전시하고 있다.

수려한 해안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땅 속에 건설하고 품격있는 미술관에 걸맞은 운영과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충분히 만끽하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은 것이 지중미술관을 찾는 요인이 된 것 같다.

섬을 여행하면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대가인 이우환 작가를 ‘안도 다다오’가 직접 초대, 독립미술관으로 설계해 지은 ‘이우환 미술관’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그의 작품을 보며 일본에서 존경받는 예술인이 되기 위한 힘겨운 삶에 경이로운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연이어 추진된 프로젝트 중 ‘이에프로젝트-집 프로젝트’는 충분한 소통으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버려진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마을과 소소한 주택가 작품을 접하면서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이제 나오시마의 인구는 400명에서 4,000명이 되었으니 소멸되어 가는 하나의 작은 섬이 아니다. 진정한 도시개발의 기획력과 실천, 그리고 소통과 예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었다. 지방소멸·인구소멸을 말로만 외치지 않고 준비하는 도시야말로, 그 대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 콘텐츠와 세계적인 건축이 지역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지역의 기업인,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각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의 미래지향점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한 선진 탐사팀도 지역을 위해 배워가고자 하는 열의를 느낀 벤치마킹 투어였다. 전남에서 시작한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말이 새삼 마음에 와닿는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깨닫는다’

인구감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박원종 의원(영광1)

2023년12월7일자 전남일보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하다.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은 국가소멸이라는 위기까지 코앞으로 다가와 암울한 미래를 예측한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져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5년간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이렇듯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 전망은 매우 처참한 상황이다. UN이 밝힌 인구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50년 총인구수는 현재보다 11.7%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수는 약 35.7%나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부양 인구수는 44.7%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총인구수보다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비율로 감소하지만 피부양 인구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현재처럼 출산율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총인구수는 예측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인구구조 변화는 피부양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발전 속도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로 소멸 위험에 빠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간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무엇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 보육과 관련된 인구 정책을 살펴보면 단발성,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연 우리 젊은 세대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것일까.

정책수혜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심 어린 질문과 토론을 시행해본 적이 있었는가. 정책은 수혜자의 의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어져야 한

다. 그래야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지금 세대들은 아이의 교육, 놀이, 의료 등 3가지의 환경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출산을 고민할 것이다. 현금성 지원은 지원받는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인구이동을 통해 일부 지역의 출산율은 올릴 수 있겠으나, 지역 간 출혈을 낳는 보조금 경쟁만 일으킬 뿐이다.

최근 광주시가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하자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10.5% 증가한 데 비해 인접 7개 시·군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6.9%가 감소했으며, 인접지역이 아닌 전남의 다른지역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통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인구감소가 지방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고, 국가적 위기인 인구감소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맡으면 지방정부는 육아를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98명이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일한 예산이더라도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보다 인프라 구축의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줄기찬 현금성, 단발성 지원보다 주거, 문화, 보육, 교육, 의료 인프라와 같이 지방에서도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별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말 그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기존의 지원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지방정부의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가소멸 위기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꼭꼭 숨기고 싶은 나의 마을, 나의 해남

박성재 의원(해남2)

2023년12월7일자 무등일보



나는 땅끝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한적한 어촌마을 '중리' 마을을 자주 들른다. 드라마 허준의 유배지 촬영장소가 되면서 꼭꼭 숨겨져 있던 나의 중리 마을은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게 돼 괜한 억울함(?)도 있는 것 같다.

깨끗한 물, 넓은 해변이 자랑인 중리마을은 빼어난 경관뿐 아니라 최고의 조개잡이 체험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물이 빠진 갯벌은 바지락, 고동, 게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호미질을 하면 직접 캐는 조개잡이로 남녀노소 즐거워 한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과 함께 조개잡이 하는 모습이 너무 화목하고 예뻐 보여 "보기 좋네" 한마디 했더니 "어릴 적에 나라도 이렇게 놀아주시지..." 하고 아들 핀잔을 듣는다. 괜스리 미안하고 어색함에 쭈뼛쭈뼛 해진다.

아들이 장성해지기 전에 나는 어쩌다 한번 송지면 중리마을 앞에 하루 두 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의 바닷길 '중도'를 데리고 갔는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서 중도와 건너 작은 섬 '죽도'를 걸어가다 물이 차올라 달려갔다 오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재미와 상관없이 한번쯤은 아빠 노릇도 한 것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며 캠핑을 하고 해외 여행도 내집 드나들 듯이 가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자연 속에서 방목을 당했다.

'좋은 경치 이거나 보고 그냥 잘 자라다오' 하셨는지 우리의 어린 날은 다들 그렇게 자본자축 하면서 새까맣게 살았다.

몇 해 전만 해도 내가 본 해남의 풍경은 나무의 신록이 돋기 전 바다가 더 푸르렀던 기억이 있다. 분명 봄은 바다에서 시작됐고 봄 마중은 바다로 가야했지만 요즘은 지역의정활동 하기에 바빠 동분서주 흥길동이 돼 바다 내음도 맡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 해남에게 미안하고 아름다운 중리에게도 미안하다.

남도의 아름다운 사찰 중 한 곳인 달마산 미황사는 내가 흥길동이 되어서도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 자주 가는 절이다.

해남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손꼽히는 풍경과 달마산 트레일 코스인 달마고도, 기암괴석의 암릉 등산의 묘미와 스릴이 있는 등산코스가 있다. 연중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전라도의 단풍 여행지로도 널리 소개가 됐다.

나는 미황사 입구에 서정지 라는 아담한 저수지가 너무 황홀하다. 물 건너편에 민가와 산장형 식당이 영업 중인 곳으로 주변 단풍이 곱게 물들 때 아침 물안개가 피면 몽환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곳이다.

나의 낡은 핸드폰으로 대충 절경을 찍어도 멋진 한 폭의 작품이 돼 버린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은 명승 제59호로 지정될 만큼 수려한 경관을 가졌으며 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마음이 심란할 때 복잡한 마음을 버리려 108계단을 올라 대웅전 마당까지 가는길은 계단 주변 숲에서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가을의 풍경을 보노라 계단의 수를 잊게 만든다.

나만 아는 단풍절경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천왕문 왼쪽에 찾집 맞은편 화장실 뒤편에 수백년은 됐을 단풍나무는 그냥 붉디 붉다가 약간 검게까지 보이는 절경이 펼쳐져 있다. 나뭇가지와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눈이 부시게 찬란하다.

내가 해남에 주욱 정착하고 사는 것은 비단 이러한 절경만은 아닐 것이다. 어디서나 함부로 먹지 못하는 남도음식의 끝판왕 해남 한정식과 횃집은 그냥 가는곳마다 맛의 절정을 이룬다.

보리밥, 산채정식, 떡갈비, 닭코스 요리, 삼치회, 생고기, 황칠오리백숙 등 해남 미남(味南)축제는 괜히 있는 축제가 아니다. 땅끝 여행 삼시세끼, 어떤 음식을 택하더라도 해남의 푸짐한 인심만큼이나 맛도 일품임을 장담한다.

이렇게 좋은 나의 고향 해남을 나 혼자 꼭꼭 숨겨두고 즐기고 싶다. 다도해의 빼어난 풍광에 눈이 호강하고, 별 받은 바다가 눈부시게 오글거리며 작은 섬들이 여백을 메워 풍광까지 좋으니 나 홀로 만끽 하고 싶은 맘 뿐이다.

발길이 닿는 곳 마다 정신과 영혼이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대로 흘러가는 듯 한없이 편안하고 고요한 내 마음을 나의 고향도 받아주면 좋겠다.

해남 짝사랑 중인 나는 오늘도 흥길동으로 변신해 겸손과 충신의 마음을 품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겠다.

전남권 의대 신설, 마지막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서동욱 의원(순천4)

2023년12월11일자 광남일보



'빅5'라 불리는 서울 대형 종합 병원 인근에는 환자촌이라 불리는 곳들이 있다. 서울을 오가는 지방의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머무르는 원룸이나 고시텔을 이르는 말이 다름아닌 환자촌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의료기본권의 불평등이 불러온 아픈 현실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생과 사를 가르는 가장 절실한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 존재감을 공고히 드러내고 있다.

쏟아져 내리는 극에 달한 의료 인프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전남지역 여야 4당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대안 도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전남 여야 4당이 입을 모아 외친 선명한 명제는 정부의 의대 증원계획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을 포함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 전남은 의료 불모지에 다름없다. 도내 22개의 시군 중 17개의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의 섬 중 60% 이상이 전남에 분포하는 등 낙후된 지리적 상황에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4만7000명(25.5%)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기관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사고 또한 빈발해 높은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에는 의과대학과 20개 이상 진료과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연간 83만 명의 도민이 중증 응급, 외상 등 고난도 치료를 위해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유출되는 의료 비용만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극심한 의료공백이 결국 지역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으로 의료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21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한 바 있다.

18년째 동결됐던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응급의학전문의 또한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낙수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없듯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혁신적 의료 개선이 불가능하다.

응급상황에 적시 대처가 가능한 충분한 의료인력을 구축하고, 이 인력이 타 지역 유출 없이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모든 문제를 푸는 근원적 열쇠는 전남권 의대 신설이다.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취약지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대 신설을 막연히 '지속적 검토'로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는 균등한 의료기본권의 보장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그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8월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의 의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성명 발표, 언론·가두 홍보 등 적극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기자회견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어 정부에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국회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의대 신설은 전남도민에게 있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절박성과 절기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 보고 비상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 시간을 뜻하는 '골든타임'.

어쩌면 지금 우리는 전남도민의 생명이 걸린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하길 기대한다.

다시, ‘김대중 정신’을 생각한다

박문옥 의원(목포3)

2023년12월13일자 전남매일



오는 1월 6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호남에서 탄생한 유일한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 100주년을 맞이하는 각종 기념사업이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창이다. 모진 탄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인동초’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탄생 100주년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1970년 신민당 대선후보 이후 4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과 777일의 해외 망명 등 독특한 삶을 살아온 정치인 김대중. 본래 해운회사와 신문사를 경영했던 사업가 출신 정치인 김대중은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세 번의 대선 낙선을 거치며 ‘낙선 전문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선거에 대해서는 운이 없었다.

처절한 민주주의 갈망

또한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야당 정치인 김대중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살해 시도와 신군부에 의한 사형선고를 겪는 그야말로 탄압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정치인 김대중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처절히 갈망했는지 너무나 잘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후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당선의 기쁨도 잠시, 그의 앞에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부도와 실업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놓여졌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과감한 규제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요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등을 통해 국난이 조기 극복 되었다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와 IT, 문화, 의료 등 각 분야에 있어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류, K컬처, K의료, K국방 등 K라는 알파벳이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도록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그

의 햇볕정책은 2000년 6월 남북정상 간의 대화를 이끌어냈고, 화해·협력·통일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등 통일과 외교분야에 있어서 남다른 성과를 나타냈다.

2023년 대한민국.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과 ‘현재의 민주주의’는 정치인 김대중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만들고 싶어했던 모습일까?

지난해 2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생가를 방문해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진영의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떠나 협치와 상생이 요원한 현 정치 상황을 보면서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협력의 정치가 아쉬운 상황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을 마주하는 현 상황도 많이 낯설다. 북한의 일방적 파기선언으로 일부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6·15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환호했던 당시를 떠올린다. 2000년 당시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외교적 노력을 통한 관계 개선에 힘써야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김대중 정신’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사회통합 가르침

필자는 지난 201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정 질문을 하였고, 전남도는 ‘김대중 평화회의’라는 국제행사 개최로 화답했다. 올 상반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에 김대중 정신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길 요구했고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한 인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업적,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룩되었는지 자라나는 세대, 그리고 지역에 알리자는 취지이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까지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한 사람의 희생과 가르침.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 (김대중 어록 중)

콩콩팔팔! 나는 농사짓는 도의원(道議員)이다

김성일 의원(해남1)

2023년12월13일자 무등일보



최근 종영한 예능 프로그램 '콩콩팔팔'이 인기다. '콩콩팔팔'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팔 심은데 팔 난다'라는 속담의 예능식 줄임말이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그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농업인들의 현실도 그러할까. 답은 아니다. 텍스트

그대로의 '콩콩팔팔'은 호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의 뜻이 그대로 이뤄지기에는, 농업 현장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도 많다.

특히 작황과 시장 예측이 들쭉날쭉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잦다. 그 대표적 예가 가을배추다. 가을배추 정식은 9월부터 시작된다. 필자는 매년 거르지 않고 가을배추를 심는다. 고이 키워낸 정성과 바람이 그대로 담긴다면 배추 농사는 풍년이어야 하고 가격 또한 후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 변화나 재배면적 등 가지각색의 이유로 배추 가격은 매년 요동을 친다.

올해도 예전하다. 여름부터 금배추라며 호들갑이었는데 10월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1만3천152ha로 지난해보다 5.7% 감소했다. 4년 만에 가장 작은 재배면적이라며 배추값 상승으로 금(金)추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무성했다. 이에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 가용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착 김장철에 접어들자 상황이 변했다. 한파에 대비한 조기 정식과 온화한 생육환경으로 물량이 과잉 출하됐고 배추 소비 부진까지 겹쳐 가격은 약세를 띠게 됐다. 정부는 서둘러 배추 5천t을 매입·비축해 가을·겨울 배추 병행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고 한파 등으로 인한 1월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완벽한 방어책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과잉 생산 혹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등폭락을 잡을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혹자는 농산물 생산 쿼터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농산물 생산 쿼터제는 쉽게 말해 주산지별로 해남에선 배추만, 신안에선 마늘만, 청양에선 고추만 재배하는 식으로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좋은 시도지만 주산지별 재배농산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아직

은 의견의 분분하기에, 더 나은 대안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업의 안정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 벼농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벼농사는 토양 개량과 논갈이를 거쳐 4~5월 모내기하고, 밀거름, 제초제 살포 등의 과정을 거쳐 8월께 벼이삭이 올라오면 여름 땀벌에 벼가 익고 10월께 수확을 한다. 수확을 마치고 나서 볏짚 깔거나 논갈이로 농사는 마감된다. 벼농사 1년의 주요 여정이다. 그러나 농사의 커튼콜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쌀값이다.

양곡관리법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쌀 적정 생산 등을 내걸고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위태롭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평균 쌀값은 80kg들이 한 가마당 19만8천620원(11월25일자)으로 산지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졌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2023년산 민간재고 5만t을 매입해 식량 원조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해법대로 시장이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난 4월 쌀값 폭락 방지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또 최근 야당이 중심이 돼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새롭게 마련됐지만,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농민처럼 가격 불안 위협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농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제도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해본다.

종영한 '콩콩팔팔'은 시골살이에 뛰어드는 연예인들이 직접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가 주변인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노동의 완결이 나눔의 풍성함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우리의 농촌도 훈훈한 '콩콩팔팔'이 될 수 있을까? 부디 뿌린 대로 거두겠다는 소박한 농부의 바람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길, 천상 농부는 바라는 바다.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검토해야

최정훈 의원(목포4)

2023년 12월 20일자 광주일보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 25조)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경우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며, 인구 범위(인구비례 2대 1)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다.

제출된 전남의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서부권인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공중 분해하여 각각 인근 선거구에 합쳐서 1석을 줄이고, 동부권인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를 순천읍과 광양·곡성·구례로 분구하여 1석을 늘리는 것이다.

그 결과, 서부권 9개 시·군(2개 시, 7개 군)은 인구 72만 명에 3석, 중부권(변동 없음) 8개 군은 인구 34만 명에 2석, 동부권 5개 시·군(3개 시, 2개 군)은 인구 76만 명에 5석이 된다. 권역별 선거구당 평균 인구를 보면 서부권은 24만 명, 동부권은 15만 명으로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거의 9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주·화순·무안과 목포·신안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각각 26만 9415명, 25만 4447명으로 1석 씩임에 반해 여수와 순천 선거구는 각각 27만 4495명, 27만 8712명이지만 2석 씩이라는 점이다. 여수는 선거구당 13만 7248명이고 나주·화순·무안 선거구는 26만 9415명으로 그 차이가 무려 13만 2168명이다. 기준인구의 하한선(13만 5521명)과 분구선(27만 1042명)에 반하지는 않지만,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등 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면 이해

할 수 없는 획정안이다.

여수와 순천이 전남지역에서 타 20개 시·군에 비해 매우 심하게 과잉 대표가 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강조한 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안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서부권 농산어촌 지역에서 1석을 줄이고, 동부권 도시지역에 1석을 늘렸는지도 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동부권과 중서부권의 경제력 차이는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권역별 인구 비율을 적용해 비교하면 동부권이 중서부권보다 약 1.7배 높고, 특히 제조업부문은 무려 4.5배나 높게 나타난다. 동부권이 농업·임업·어업과 공공행정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압도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순천에 전남도청 동부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기존의 동부지역본부를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공공행정부문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 중심이 동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적인 동부권 쏠림현상으로 타 지역의 패배감과 상실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듯 전남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균형을 잡고 있던 정치부문에서도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가중시키면서까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대폭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동부권에 모든 패권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합리하고 편향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전남 동부권과 중서부권 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남 내에서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커져만 갈 것이다. 이번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할 이유다.

본회의 방청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화 (061) 286-8332번을 이용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의 제한

-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과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의회 견학

전라남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고자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학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전라남도의회 누리집(<https://www.jnas-assembly.go.kr>)의 견학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방문 10일 전까지 팩스(061-286-8490)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의회소식지 신청

생생한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무료로 구독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https://www.jnasassembly.go.kr>)에 접속한 후 자료실에 있는 의회소식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배송지로 무료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시청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누리집(<https://www.jnasassembly.go.kr>)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의 인터넷방송을 선택하시면 회의 진행 과정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377회 임시회(10일간)
· 업무보고, 안건처리, 상임위 활동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설 연휴 2.9.-2.12.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78회 임시회(9일간)
· 안건처리, 상임위 활동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79회 임시회(9일간)
· 안건처리, 상임위 활동
※ 22대 국회의원 선거 4.10.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380회 임시회(11일간)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20~22)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381회 제1차 정례회(16일간)
· 2023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제382회 임시회(2일간)
· 제12대 후반기 원구성(27-28)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383회 임시회(11일간)
· 업무보고(상임위), 안건처리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84회 임시회(11일간)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4-6)
※ 추석 연휴 9.15.-9.18.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385회 임시회(10일간)
· 안건처리, 상임위 활동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86회 제2차 정례회(42일간)
· 2024년 행정사무감사(1~14)
· 2024년 추경예산 제안설명 및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15)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4년 추경 예산안 승인(5)
· 2025년 예산안 승인(12)



전라남도의회

<https://www.jnassembly.go.kr>

전라남도의회 소식